

현안연구

2024

문화예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방향 설정 연구

Research on Policy
Directions for Nurturing
Talent in Culture and
the Arts

황아람 · 김규원

현안연구 2024-05

문화예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방향 설정 연구

Research on Policy Directions for Nurturing Talent in Culture and the Arts

황아람·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 책임

황아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공동 연구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목차

| | |
|-------------------------------|-----------|
| 제1장 서론 | 1 |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
| 1. 연구 배경 | 3 |
| 2. 연구 목적 | 5 |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6 |
| 1. 연구 범위 | 6 |
| 2. 연구 방법 | 6 |
| 제2장 예술인재 양성 여건 및 환경 분석 | 9 |
| 제1절 예술인재 양성 여건 분석 | 11 |
| 1. 예술인재 양성 정책 개요 | 11 |
| 2. 고등교육기관 운영 현황 | 25 |
| 3. 국외 예술대학 운영 현황 | 30 |
| 제2절 거시환경 분석 | 35 |
| 1. 정책적 환경 | 35 |
| 2. 경제적 환경 | 39 |
| 3. 사회적 환경 | 43 |
| 4. 기술적 환경 | 46 |
| 제3절 예술환경 분석 | 48 |
| 1. 예술계 산업구조 | 48 |
| 2. 예술계 노동구조 | 51 |
| 제3장 예술인재 양성 정책 방향 | 53 |
| 제1절 기본 방향 및 전략 도출 | 55 |
| 1. 기본 방향 도출 | 55 |
| 2. 정책 전략 도출 | 58 |

| | |
|---------------------|-----------|
| 제2절 국립예술대학 설립 방향 | 60 |
| 1. 배경 및 필요성 | 60 |
| 2. 설립 기본 방향 | 62 |
| 제3절 국립예술대학 운영 계획(안) | 66 |
| 1. 설립 방안 | 66 |
| 2. 단계별 운영 계획 | 73 |
| 제4장 결론 | 79 |
| 제1절 결론 | 81 |
| 참고문헌 / | 85 |

표 목차

| | |
|--|----|
| 〈표 1-1〉 연구 수행 절차(DMAIC) | 7 |
| 〈표 2-1〉 창의노동(creative labour)의 세 가지 범주 | 12 |
| 〈표 2-2〉 역대 G20의 문화 관련 논의에 관한 우선순위 | 13 |
| 〈표 2-3〉 우리나라의 예술인재 양성 단계별 구분 | 15 |
| 〈표 2-4〉 부처별x사업유형별 재정지원 현황 | 19 |
| 〈표 2-5〉 부처별x사업목적별 재정지원 현황 | 19 |
| 〈표 2-6〉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등교육(전문가 및 성인 대상) 재정지원 사업 현황 (사업목적별 사업명) | 20 |
| 〈표 2-7〉 새 정부 문화예술 정책의 미래예술인재 발굴 정책 과제 | 22 |
| 〈표 2-8〉 일반대학 운영 학과수 현황(2023년 기준) | 24 |
| 〈표 2-9〉 예술대학의 유형 | 25 |
| 〈표 2-10〉 2023년 기준 전국 대학의 지열별x계열별 총원률(공학, 교육, 사회, 예체능) | 26 |
| 〈표 2-11〉 2023년 기준 전국 대학의 지열별x계열별 총원률(의약, 인문, 자연) | 26 |
| 〈표 2-12〉 국내 예술대학 운영 현황(2023년 기준) | 27 |
| 〈표 2-13〉 국립대학 예체능계열 학과 운영 현황(2023년 기준) | 28 |
| 〈표 2-14〉 지난 10년 간 예체능계열별 학생수 추이(입학자 기준) | 29 |
| 〈표 2-15〉 OECD 국가 고등교육 이수율 | 44 |
| 〈표 2-16〉 OECD 국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44 |
| 〈표 2-17〉 주요 국제기구의 문화 및 창조경제의 범위 | 48 |
| 〈표 3-1〉 예술인재 정책 PEST x SWOT 분석 | 56 |
| 〈표 3-2〉 예술인재 양성 정책 전략 도출 | 59 |
| 〈표 3-3〉 국립예술대학 설립 방안 | 67 |
| 〈표 3-4〉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 설립기준 | 69 |
| 〈표 3-5〉 국립예술대학 운영 모델 (예시) | 70 |
| 〈표 4-1〉 제2국립예술대학 단계별 운영 계획(안) | 82 |

그림 목차

| | |
|---|----|
| [그림 2-1] 창의노동(creative labour)의 세 가지 범주 | 12 |
| [그림 2-2] 전주기적 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서클(circle) | 15 |
| [그림 2-3] 2022년 중앙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지원액 기준) | 18 |
| [그림 2-4] RISE 사업 추진체계 | 37 |
| [그림 2-5] 지속가능발전(SDGs)에 기여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 유형 | 40 |
| [그림 2-6] 오락·문화 지출 금액 및 소비지출 중 오락·문화 지출 비율(2019~2023년) | 41 |
| [그림 2-7] G20의 국가별, 유형별 가계소비 지출 현황(2019년 기준) | 42 |
| [그림 2-8] 문화가치사슬의 변화(파이프라인 모델에서 네트워크 모델로) | 45 |
| [그림 2-9] 미래시민에게 요구되는 역량 | 47 |
| [그림 2-10] 창조경제의 주요 분야별 글로벌 수익 및 판매 현황 | 50 |
| [그림 2-11] 2021년 기준 일자리 취득 현황 | 52 |
| [그림 3-1] 네트워크형 예술대학 구상(안) | 63 |
| [그림 3-2] 제2국립예술대학의 교육 범위(안) | 64 |
| [그림 3-3] 제2국립예술대학 설립 기본 방향(안) | 65 |
| [그림 3-4] 대학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 | 68 |
| [그림 3-5] 국립예술대학 운영 모델 (예시) | 71 |
| [그림 4-1] 제2국립예술대학 단계별 운영 계획(안) | 82 |

문화예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방향 설정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 고등교육 지원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개편하고 분야별 인재양성 정책의 필요와 함께 범부처 협력 정책 계획을 발표
 -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설정된 2004년 이후(변수정·황남희, 2018)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꾸준히 감소, 2023년 현재 0.72명 수준임
 - 출생아 수가 2001년 60만 명대에서 2002년 40만 명대로 크게 감소하며 지방대 신입생 미달 사태가 예견되었고, 이에 따라 분야별 기초인력 육성 한계가 논의되며 대학구조조정과 같은 대학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이상림, 2023)
 - 그럼에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수도권 집중화 및 대학 서열화 등의 고질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자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 고등교육 지원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개편하기 위한 RISE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함
 -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는 미래수요에 대비한 인적역량 확보를 위해 국가의 전략적 정책 수립을 요청하고 있고, 특히 노동시장 진입 전 청년층 대상의 초기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됨(OECD, 2024)
 - 우리나라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 주재 하에 개최된 두 차례의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통해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범부처 협력 정책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래인재 양성 대응에 주력하는 실정임
- 문화예술 분야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재양성 정책이 다소 미흡하여 초기교육(중등교육 이하), 고등교육, 전문교육, 평생교육이 각기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

- 전 세계적으로 문화 분야(culture and creative industry)의 연간 수익은 약 2조 3,000억 달러로 글로벌 GDP의 3.1%에 달하는 수준이고, 글로벌 고용률에는 약 6.2%를 차지할 만큼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UNESCO, 2022a; UNTACD, 2004)
- 우리나라 역시 K-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대되며 2022년 기준 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132억 4천만 달러로 2021년 대비 6.3% 증가하는 등 국가의 산업 및 경제 발전에 있어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확대됨
- 이에 따라 분야별·장르별 숙련된 고급 예술인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120대 국정과제에서도 체계적인 문화예술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종합적 인재양성 정책 수립이 부재하여 각각의 교육단계가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양성정책의 부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바뀌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인재양성 정책 수립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여, 미래 예술계 및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적시 양성하는데 한계로 작용함
- 특히 예비예술인 양성을 책임지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부족하고, 동시에 지방대학 중심의 순수예술 학과 통폐합이 본격화되며 순수예술 기초인력 육성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순수예술 관련 학과들의 통폐합 및 융복합이 본격화되며 기초인력 육성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인력 양성 정책, 특히 예술대학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이 요구
 - 사립대학이 86% 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고등교육체계가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술인재 육성에 대한 책임 역시 사립대학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립대학 운영 위기로 인해 순수예술 분야 기초인력 육성 기반은 점차 악화되고 있음
 - 반면 과학기술 분야는 영재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전주기적 인재양성 정책을 표방하고 있고, 연구 중심 기초인력 육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지원 및 4대 과학기술원(KIAST, GIST, DGIST, UNIST)을 통한 체계적 육성을 추진함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유일의 국립예술대학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운영하

고 있지만 미래수요에 대비한 순수예술 기초인력을 육성하기에는 규모가 작아, 보다 적극적인 예술대학 정책 방안을 모색할 것이 요구됨

2. 연구 목적

- 미래예술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 설정
 - 예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비전 및 장기적 관점의 정책 추진 방향을 검토함
- 핵심기초인력 양성을 위한 예술대학 정책 개선 방안 도출
 - 예술대학 운영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진단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예술인재 양성 과제를 검토함
- 양질의 교육기회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기회의 격차를 해소
 - 지역균형발전 및 교육기회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함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4년 현재를 기준으로 예술대학 운영 현황 및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분석함
- 대상적 범위
 - 국내·외를 아울러 예술 인력 양성 현황 분석을 진행하되, 제2의 국립예술대학 설립을 위한 계획(안) 수립은 국내 상황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함
- 내용적 범위
 - 거시환경 분석을 통해 예술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함
 - 예술환경 분석을 통해 현장과 시장이 필요한 새로운 예술 교육 방향을 추가 검토함
 - 환경분석 및 사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제2의 국립예술대학 설립 계획(안)을 제시함
 - 제2국립예술대학 설립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법적 위상 등)을 제시함

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분야별 인재양성 정책 현황, 예술대학 운영 여건과 현황에 대해 문헌연구를 수행

- (사례분석) 국내외 예술대학 운영 사례를 분석하며,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예술 대학 사례를 분석
- (자문회의) 예술인재 양성 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된 제2국립예술대학 설립에 관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표 1-1〉 연구 수행 절차(DMAIC)

| 문제 설정 (Define) | 현황 진단 (Measure) | 환경 분석 (Analyse) | 개선 방안 (Improve) | 향후 계획 (Contro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재 양성 필요성 증대 현상에 대한 문제 설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예술대학 운영 현황 및 주요 사례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재양성 정책에 관한 거시환경 분석(PEST) 예술환경 내외부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재양성 정책 방향 및 전략 도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국립예술대학 설립 및 운영 방향 검토 |

문화예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방향 설정 연구

제2장

예술인재 양성 여건 및
환경 분석

제1절 예술인재 양성 여건 분석

1. 예술인재 양성 정책 개요

1) 예술인재의 정의

- 예술인재란 예술적 재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음악, 미술, 무용, 문학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작자이자, 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 (협의의 의미)
- 최근에는 예술의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창의적 활동 및 지적 자본(intellectual capital)을 통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goods and services)까지를 포괄한 창의경제(creative economy) 개념이 부상하고 있어, 예술인재의 범위도 전문예술가부터 유사 연계 분야 인력까지 확대될 필요성이 증가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핵심 창작인력인 전문예술가를 포함한 지원 전문인력, 유사 연계 종사자 등을 포괄하여 '창의예술인재'로 명명하고, 향후 창의산업 분야의 창의노동(creative labour)을 위한 인력으로 간주하여 미래수요에 대응 (광의의 의미)
 - 여기서 창의노동(creative labour)에 대한 범주의 구분은 일찍이 문화·창의 영역(Culture & Creative Sectors, CCSs)을 고부가가치의 영역으로 인식했던 영국의 NESTA에서 진행한 바 있음(Higgs, Cuning and Bakhshi, 2008)
 - 이는 창의산업 영역에서 일하는 창의적 직업을 가진 근로자, 비창의적 직업을 가진 근로자, 비창의적 산업에서 일하는 창의적 직업을 가진 근로자로 구분함¹⁾
 - 첫째, 전문예술가 및 창의인력(specialist artists and specialist creative)은 창의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창의적 직업을 가진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음악, 미술, 무용, 문학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를 지칭함

1) 이러한 분류는 Otis college(2020), UNEN(2022) 등에서도 따르고 있는 구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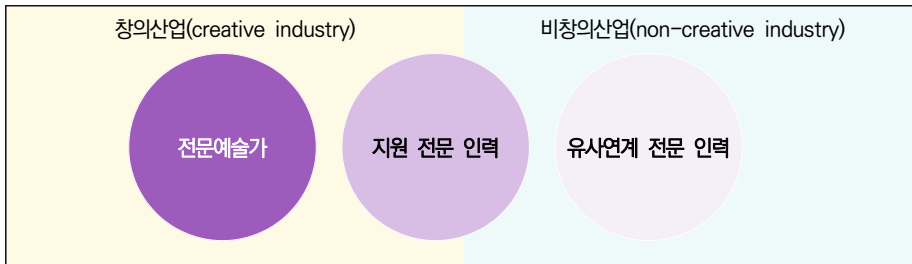
- 둘째, 지원 전문인력(support staff and workers)은 창의 산업에 종사하는 비(非)창의적 직업을 가진 근로자로서, 기획, 행정, 회계 직원을 의미함
 - 셋째, 유사 연계 종사자(embedded creator)는 비(非)창의적 산업에 종사하면서 창의적 직업을 가진 근로자로서 가전, 자동차, 비행기 등의 제품 및 산업 디자이너 등을 의미함
- 다만 연구의 맥락에 따라 창의예술인재의 개념과 의미를 예술인재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하고자 하였음

〈표 2-1〉 창의노동(creative labour)의 세 가지 범주

| 구분 | 창의 산업(creative industry) | 비창의적 산업(non-creative industry) |
|---------------------------------------|--|---------------------------------|
| 창의적 직업 (creative occupations) | 전문예술가 및 창의인력 (specialist artists and specialist creative) | 유사 연계 종사자 (embedded creator) |
| 비창의적 직업 (non-creative occupations) | 지원 전문인력 (support staff and workers) | - |

자료: Higgs, Cuning and Bakhshi, 2008; Bakhshi, 2021 참고 연구자 작성

[그림 2-1] 창의노동(creative labour)의 세 가지 범주



2) 예술인재 양성의 중요성

- 2021년, G20 로마 문화선언의 5가지 주요 우선순위 중 하나에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전문인력(cultural and creative professionals) 역량 강화가 제시되며 국제 사회에서 미래 예술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양성을 중요하게 인식함을 확인

- UNCTAD(2022) 역시 「창조산업 4.0(Creative Industry 4.0)」에서 디지털화와 첨단 기술의 적용이 창의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창의경제 육성을 위해서는 대학을 포함한 교육 시스템(well-articulated education system) 구축이 중요성함을 제시(UNCTAD, 2022)
 - 창의경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을 포함한 교육 시스템의 중요성은 Bakhshi et al.(2013)에서 제안된 정책 의제 중 하나임
 - 자료에 따르면 창의경제에 관한 교육은 창의적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예술적 기술뿐만 아니라 상업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상업적, 관리적 기술을 포함해야 하며, 여기에는 소비자 양성의 책임도 포함됨을 언급함
 - UNCTAD(2022)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에 기반한 창의경제의 글로벌화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개발도상국이 창의경제가 가진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창의예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이 중요함을 제시함

〈표 2-2〉 역대 G20의 문화 관련 논의에 관한 우선순위

| G20 의장국 | 연도 | 의장국이 선정한 우선순위 |
|---------|------|---|
| 사우디아라비아 | 2020 | 문화경제(cultural economy)의 부상: 새로운 패러다임 1. 문화경제에 대한 관점의 변화 2. 더 나은 회복을 위한 문화와 교육의 연계 3. 디지털 전환의 기회 활용 4. 문화정책 패러다임을 공공 정책 간 강화된 시너지로 전환 |
| 이탈리아 | 2021 | 1. 문화·창의 부문을 재생과 지속가능 및 균형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 2. 문화유산의 보호와 불법 거래 방지 3. 문화를 통한 기후 변화 대응 4.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 5. 문화 분야의 디지털 전환 및 신기술 |
| 인도네시아 | 2022 |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문화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촉매이자 동력으로서의 문화 2. 문화 기반 정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익 활용 3. 공통의 관심사로서 문화 보호 및 불법 거래 방지 강화 4. 문화 상품과 문화 경제의 이익에 대한 접근 보장 5. 문화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주류화하기 위한 국제적 자원 동원 지원 |
| 인도 | 2023 | 1. 문화재 보호 및 반환 2.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활 유산 활용 3. 문화·창의 부문과 창의경제의 촉진 4. 문화의 증진·보호를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

자료: G20(2023). G20 Culture Working Group TERMS OF REFERENCE.

- 이처럼 문화예술, 넓게는 창의경제 분야가 국가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전략적 창의예술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 발전에의 기여 및 성과 확대가 중요해졌고,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 모색이 요구됨
- 이에 그동안 우리나라의 예술인재 양성 정책의 흐름과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순수 예술 기초인력 육성의 요체인 예술대학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예술인재 양성 정책의 한계와 문제를 진단함

3) 예술인재 양성 정책의 흐름 및 현황

- 우리나라의 예술인재 양성 체계는 조기교육(중등교육 이하), 고등교육, 전문교육, 평생교육 등 단계별로 이뤄지고 있지만,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추진되기 보다는 각기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
 - 국가는 헌법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기에²⁾, 의무교육인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과 고등교육(대학 및 대학원), 평생교육까지를 학교교육의 범위로 규정하고 공공성을 가져야 함을 명시함(교육기본법 제9조)
 - 이에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 및 초·중·고교 의무교육 등 기초교육 단계에서는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등교육은 사립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미약한 실정임
 - 현재 예술인재 양성 체계는 청소년 대상의 조기교육부터 고등교육, 전문교육, 평생교육 등 비교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인재양성 정책 계획이라기보다는 개별법에 근거한 교육 또는 프로그램 단위의 정책 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호간 연계성이 떨어짐
 - 참고로 조기교육은 영재교육과 청소년 대상 중·고등 교육으로 구분되며, 고등교육은 대학교육, 전문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산하 및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대상 직업교육과 전문인력 대상 재교육 등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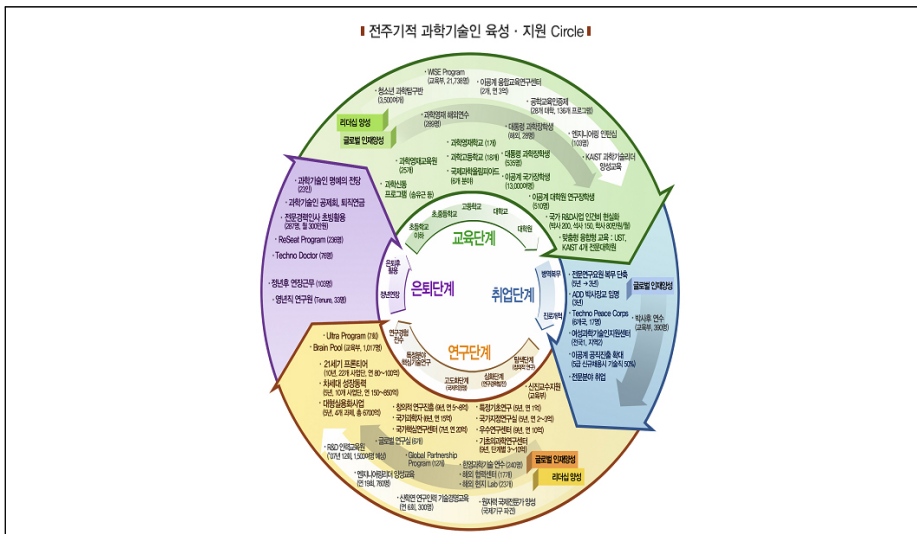
2)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 조건으로 '교육 받을 권리의 보장'에 관한 규정을 의미함

〈표 2-3〉 우리나라의 예술인재 양성 단계별 구분

| 교육단계 | 조기교육(중등교육 이하) | | 고등교육 | 전문교육 | | 평생교육 |
|------|-------------------------------|------------------------------------|--------------|----------------------------|--------------------------|-----------------|
| 교육구분 | 영재교육 | 중·고등 | 대학(원) | 직업교육 | 재교육 (학예사, 사서 등) | 평생교육 |
| 교육기관 | 한예중 영재교육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국악중·고, 전통예술중·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예술 종합학교 |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

- 한편, 인재양성 정책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과학기술 분야는 일찍이 전주기적 과학기술인 육성 정책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각 단계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 또한 여성 및 중장년 과학기술인 등 정책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상황임

〔그림 2-2〕 전주기적 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서클(circle)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07.3.22.), 과학인력 '유년에서 노후까지' 육성·지원

- 현재 예술인재 양성 정책에서는 현장 예술인 또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전문교육)의 비중이 조기교육이나 기초교육에 비해 높은 상황이며,

이는 문화기반시설이 건립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데에서 기인

-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수요에
부응해 1987년 문화중보자 및 문화행정요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대부터는 사서인력, 학예인력,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
한 자격제도를 시행함
 - 또한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공연법」, 「지역
문화진흥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개별법령에 문화인력, 전문인력, 여가전문
인력, 공연예술 지원인력의 양성이 규정됨에 따라 정책을 소관하는 각각의 기관
에서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 그러나 기관별 개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유사·
중복된 교육훈련이 제공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임
 - 한편 소수 정예의 영화 연출, 촬영, 애니메이션 전공을 개설·운영해 성과를 보인
한국영화아카데미(1984)는 기초인력 양성에 기여한 바가 크나, 정규 학교교육
과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타 전문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성격이 유사함
 - 이처럼 초기의 예술인재 양성 정책은 순수예술 기초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육 과정보다는 이미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의
필요로부터 시작해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보편화된 상황임
- 국가 차원에서 예술인재를 본격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국악학교 개
교(현. 국악중·고등학교), 1992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부터로 볼 수 있지만, 수
도권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전국 단위의 교육 수요를 해소하는데 난항
- 현재의 국악중·고등학교는 최초의 중고등 6년제 국악교육기관인 국립국악원 부
설의 국악사양성소로 1955년 개소하였고, 1972년 국악고등학교로 전환(중학교
과정 폐지), 1991년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인가받아 국악학교로 개교함
 - 같은 시기 국립예술학교 설립계획이 반영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1990)에
근거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이 추진되었었고 음악원을 시작으로 연극원,
무용원, 영상원 등이 순차적으로 개원, 현재의 6개원 체제를 형성함
 - 개원 30주년을 맞이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지금까지 각 분야별 우수한 예술인

재를 배출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고, 이를 통해 국가의 예술분야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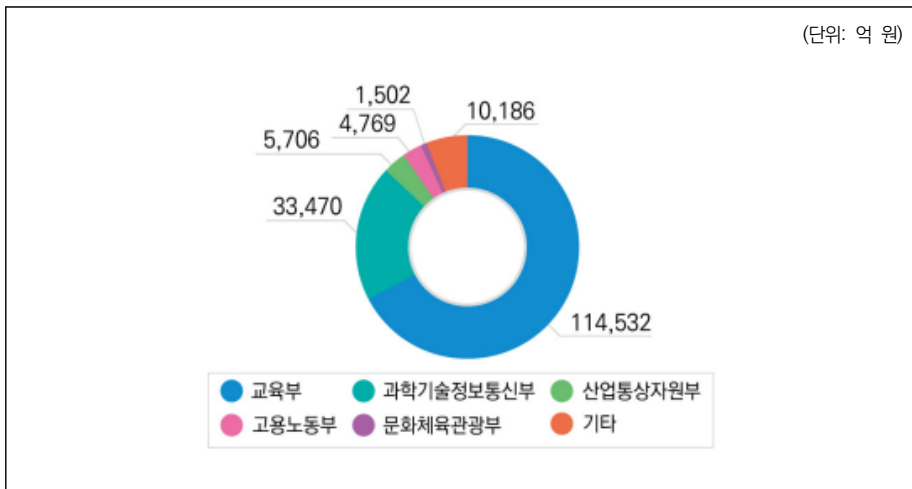
- 그러나 국가 주도의 기초인력 양성 교육기관은 서울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뿐이라 비수도권 지역에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분배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존재함

- 또한, 대부분의 정책 지원이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기초교육 과정을 거친 예비예술인들이 교육 이후의 커리어를 설계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창작지원금 등을 통해 예술가 및 예비인력의 자립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일시적, 단속적 처방에 불과해 예비예술인재의 장기적 활동을 위한 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함

4) 예술인재 양성 정책의 최근 동향

- 2022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는 1,502억 원으로 전체 (170,165억 원)의 0.88%를 차지하며 총 84개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결코 적지 않은 규모
 - 중앙정부(부·처·청·위원회) 48개 기관 중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운영한 기관은 총 31개 기관이며, 그 규모는 교육부(67,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19.67%), 산업통상자원부(3.35%), 고용노동부(2.80%), 문화체육관광부(0.88%) 순임
 -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81개 일반지원사업 예산이 1,111억 원(74%), 3개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예산이 391억 원(26%)이며, 사업목적별로 살펴보면 인력양성 33개(265억 원), 연구개발(256억 원),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391억 원)임

[그림 2-3] 2022년 중앙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지원액 기준)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2023). 2022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 분석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세부 목록을 살펴보면(〈표 2-6〉) 일자리 및 취업 연계, 일반 전문가 및 성인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 예비예술인재 지원을 위한 사업은 부족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1,502억 원) 중에서 소속 대학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지원(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1,111억원, 74%)이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부처의 교육재정 규모이나, 프로그램 위주의 일시적이고 단속적 사업이라 중장기적 관점의 예술분야 기초인력을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표 2-4〉 부처별x사업유형별 재정지원 현황

| 구분 | 일반지원사업 | | | 학자금지원사업 | | |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 | | 부처 총합(A) | | |
|-----------|--------|--------|--------|---------|--------|--------|------------------|--------|--------|----------|---------|--------|
| | 사업수 | 지원액 | 비율 | 사업수 | 지원액 | 비율 | 사업수 | 지원액 | 비율 | 사업수 | 지원액 | 비율 |
| 교육부 | 81 | 35,112 | 43.94 | 12 | 43,129 | 98.06 | 13 | 36,290 | 78.42 | 106 | 114,532 | 67.31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94 | 27,583 | 34.52 | 1 | 486 | 1.10 | 5 | 5,401 | 11.67 | 200 | 33,470 | 19.67 |
| 산업통상자원부 | 119 | 5,677 | 7.10 | - | - | - | 1 | 28 | 0.06 | 120 | 5,706 | 3.35 |
| 고용노동부 | 9 | 1,262 | 1.58 | - | - | - | 3 | 3,507 | 7.58 | 12 | 4,769 | 2.80 |
| 문화체육관광부 | 81 | 1,111 | 1.39 | - | - | - | 3 | 391 | 0.84 | 84 | 1,502 | 0.88 |
| 보건복지부 | 86 | 1,464 | 1.83 | - | - | - | - | - | - | 86 | 1,464 | 0.86 |
| 농림축산식품부 | 67 | 895 | 1.12 | 1 | 138 | 0.31 | 5 | 345 | 0.75 | 73 | 1,378 | 0.81 |
| 농촌진흥청 | 85 | 1,196 | 1.50 | - | - | - | - | - | - | 85 | 1,196 | 0.70 |
| 중소벤처기업부 | 22 | 922 | 1.15 | - | - | - | - | - | - | 22 | 922 | 0.54 |
| 환경부 | 44 | 842 | 1.05 | - | - | - | - | - | - | 44 | 842 | 0.49 |
| 국토교통부 | 43 | 782 | 0.98 | - | - | - | - | - | - | 43 | 782 | 0.46 |
| 식품의약품안전처 | 50 | 661 | 0.83 | - | - | - | - | - | - | 50 | 661 | 0.39 |
| 해양수산부 | 53 | 638 | 0.80 | - | - | - | - | - | - | 53 | 638 | 0.37 |
| 문화재청 | 6 | 32 | 0.04 | - | - | - | 13 | 313 | 0.68 | 19 | 345 | 0.20 |
| 외교부 | 14 | 274 | 0.34 | - | - | - | - | - | - | 14 | 274 | 0.16 |
| 산림청 | 21 | 268 | 0.34 | - | - | - | - | - | - | 21 | 268 | 0.16 |
| 질병관리청 | 25 | 252 | 0.32 | - | - | - | - | - | - | 25 | 252 | 0.15 |
| 행정안전부 | 40 | 247 | 0.31 | - | - | - | - | - | - | 40 | 247 | 0.15 |
| 국가보훈처 | - | - | - | 2 | 230 | 0.52 | - | - | - | 2 | 230 | 0.14 |
| 원자력안전위원회 | 4 | 161 | 0.20 | - | - | - | - | - | - | 4 | 161 | 0.09 |
| 가정청 | 16 | 147 | 0.18 | - | - | - | - | - | - | 16 | 147 | 0.09 |
| 특허청 | 7 | 98 | 0.12 | - | - | - | - | - | - | 7 | 98 | 0.06 |
| 법무부 | 2 | 69 | 0.09 | - | - | - | - | - | - | 2 | 69 | 0.04 |
| 소방청 | 12 | 54 | 0.07 | - | - | - | - | - | - | 12 | 54 | 0.03 |
| 해양경찰청 | 21 | 50 | 0.06 | - | - | - | - | - | - | 21 | 50 | 0.03 |
| 경찰청 | 6 | 36 | 0.05 | - | - | - | - | - | - | 6 | 36 | 0.02 |
| 통일부 | 2 | 32 | 0.04 | - | - | - | - | - | - | 2 | 32 | 0.02 |
| 금융위원회 | 2 | 26 | 0.03 | - | - | - | - | - | - | 2 | 26 | 0.02 |
| 방위사업청 | 2 | 7 | 0.01 | - | - | - | - | - | - | 2 | 7 | 0.00 |
| 여성가족부 | 2 | 4 | 0.01 | - | - | - | - | - | - | 2 | 4 | 0.00 |
| 방송통신위원회 | 1 | 0 | 0.00 | - | - | - | - | - | - | 1 | 0 | 0.00 |
| 합계(B) | 1,117 | 79,906 | 100.00 | 16 | 43,984 | 100.00 | 43 | 46,276 | 100.00 | 1,176 | 170,165 | 100.00 |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2023). 2022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 분석보고서

〈표 2-5〉 부처별x사업목적별 재정지원 현황

| 구분 | 인액양성 | | | 연구개발 | | | 인액양성 및 연구개발(공동) | | |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 | | | 기타 | | | 부처 총합(A) | | |
|-----------|------|--------|--------|------|--------|--------|-----------------|--------|--------|----------------|--------|--------|-----|-----|--------|----------|---------|--------|
| | 사업수 | 지원액 | 비율 | 사업수 | 지원액 | 비율 | 사업수 | 지원액 | 비율 | 사업수 | 지원액 | 비율 | 사업수 | 지원액 | 비율 | 사업수 | 지원액 | 비율 |
| 교육부 | 56 | 57,521 | 89.44 | 19 | 5,406 | 12.91 | 17 | 15,309 | 91.48 | 13 | 36,290 | 78.42 | 1 | 5 | 0.52 | 106 | 114,532 | 67.31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3 | 2,285 | 3.55 | 163 | 25,099 | 59.94 | 8 | 661 | 3.95 | 5 | 5,401 | 11.67 | 1 | 24 | 2.48 | 200 | 33,470 | 19.67 |
| 산업통상자원부 | 6 | 1,248 | 1.94 | 97 | 3,898 | 9.21 | 4 | 469 | 2.80 | 1 | 28 | 0.06 | 12 | 103 | 10.65 | 120 | 5,706 | 3.35 |
| 고용노동부 | 7 | 1,248 | 1.94 | - | - | - | - | - | - | 3 | 3,507 | 7.58 | 2 | 14 | 1.45 | 12 | 4,769 | 2.80 |
| 문화체육관광부 | 33 | 265 | 0.41 | 29 | 250 | 0.61 | - | - | - | 3 | 391 | 0.84 | 19 | 591 | 61.03 | 84 | 1,502 | 0.88 |
| 보건복지부 | 9 | 107 | 0.17 | 66 | 1,215 | 2.90 | 3 | 105 | 0.63 | - | - | - | 8 | 38 | 3.93 | 86 | 1,464 | 0.86 |
| 농림축산식품부 | 10 | 249 | 0.39 | 52 | 675 | 1.61 | 3 | 105 | 0.63 | 5 | 345 | 0.75 | 3 | 5 | 0.53 | 73 | 1,378 | 0.81 |
| 농촌진흥청 | - | - | - | 85 | 1,196 | 2.86 | - | - | - | - | - | - | - | - | - | 85 | 1,196 | 0.70 |
| 중소벤처기업부 | 9 | 491 | 0.76 | 9 | 289 | 0.69 | 3 | 56 | 0.33 | - | - | - | 1 | 86 | 8.91 | 22 | 922 | 0.54 |
| 환경부 | - | - | - | 42 | 805 | 1.92 | 1 | 16 | 0.10 | - | - | - | 1 | 21 | 2.16 | 44 | 842 | 0.49 |
| 국토교통부 | 10 | 64 | 0.10 | 32 | 706 | 1.69 | 1 | 13 | 0.08 | - | - | - | - | - | - | 43 | 782 | 0.46 |
| 식품의약품안전처 | 1 | 40 | 0.06 | 49 | 621 | 1.48 | - | - | - | - | - | - | - | - | - | 50 | 661 | 0.39 |
| 해양수산부 | 3 | 84 | 0.13 | 50 | 554 | 1.32 | - | - | - | - | - | - | - | - | - | 53 | 638 | 0.37 |
| 문화재청 | 1 | 4 | 0.01 | 4 | 28 | 0.07 | - | - | - | 13 | 313 | 0.68 | 1 | 0 | 0.01 | 19 | 345 | 0.20 |
| 외교부 | 5 | 260 | 0.40 | 8 | 14 | 0.03 | - | - | - | - | - | - | 1 | 0 | 0.05 | 14 | 274 | 0.16 |
| 산림청 | 4 | 66 | 0.10 | 17 | 202 | 0.48 | - | - | - | - | - | - | - | - | - | 21 | 268 | 0.16 |
| 질병관리청 | 1 | 2 | 0.00 | 24 | 251 | 0.60 | - | - | - | - | - | - | - | - | - | 25 | 252 | 0.15 |
| 행정안전부 | 3 | 29 | 0.05 | 37 | 218 | 0.52 | - | - | - | - | - | - | - | - | - | 40 | 247 | 0.15 |
| 국가보훈처 | 2 | 230 | 0.36 | - | - | - | - | - | - | - | - | - | - | - | - | 2 | 230 | 0.14 |
| 원자력안전위원회 | - | - | - | 3 | 147 | 0.35 | - | - | - | - | - | - | 1 | 13 | 1.36 | 4 | 161 | 0.09 |
| 가정청 | - | - | - | 16 | 147 | 0.35 | - | - | - | - | - | - | - | - | - | 16 | 147 | 0.09 |
| 특허청 | 6 | 57 | 0.09 | 1 | 42 | 0.10 | - | - | - | - | - | - | - | - | - | 7 | 98 | 0.06 |
| 법무부 | - | - | - | 1 | 6 | 0.01 | - | - | - | - | - | - | 1 | 64 | 6.56 | 2 | 69 | 0.04 |
| 소방청 | - | - | - | 12 | 54 | 0.13 | - | - | - | - | - | - | - | - | - | 12 | 54 | 0.03 |
| 해양경찰청 | - | - | - | 21 | 50 | 0.12 | - | - | - | - | - | - | - | - | - | 21 | 50 | 0.03 |
| 경찰청 | - | - | - | 6 | 36 | 0.09 | - | - | - | - | - | - | - | - | - | 6 | 36 | 0.02 |
| 통일부 | 2 | 32 | 0.05 | - | - | - | - | - | - | - | - | - | - | - | - | 2 | 32 | 0.02 |
| 금융위원회 | 2 | 26 | 0.04 | - | - | - | - | - | - | - | - | - | - | - | - | 2 | 26 | 0.02 |
| 방위사업청 | 2 | 7 | 0.01 | - | - | - | - | - | - | - | - | - | - | - | - | 2 | 7 | 0.00 |
| 여성가족부 | - | - | - | 1 | 1 | 0.00 | - | - | - | - | - | - | 1 | 3 | 0.35 | 2 | 4 | 0.00 |
| 방송통신위원회 | - | - | - | - | - | - | 1 | 0 | 0.00 | - | - | - | - | - | - | 1 | 0 | 0.00 |
| 합계(B) | 195 | 64,314 | 100.00 | 844 | 41,873 | 100.00 | 41 | 16,734 | 100.00 | 43 | 46,276 | 100.00 | 53 | 968 | 100.00 | 1,176 | 170,165 | 100.00 |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2023). 2022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 분석보고서

〈표 2-6〉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등교육(전문가 및 성인 대상) 재정지원 사업 현황(사업목적별 사업명)

| 사업목적 | 사업명(사업 수) | |
|------------------|---|--|
| 인재양성(HRD) 33건 |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1) | 개도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 |
| |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1) |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원 |
| |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2) |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관광전문 인력양성 |
| | 국제체육교류 지원(1) |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
| | 만화산업 육성(1) | 만화산업 인력양성 |
|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5) |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예술활동 지원, 토요문화학교 |
| |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3) | 공사립박물관 소장국가문화유산DB화 사업, 박물관·미술관 예비학예인력 단기체험형 일자리 지원(박물관),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
| |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1) | OTT·콘텐츠 특성화대학원 지원 |
| |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2) | 비대면 스포츠코칭 시장육성, 일자리 창업지원 |
| |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1) |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
| | 언론공익사업(1) | 미디어교육 사업 |
| | 예술인력 육성(1) | 차세대예술인력 육성 |
| |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1) | 인생나눔교실 운영 |
| |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1) | 저작권교육및홍보 |
| |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1) | 불법복제물 현장단속 및 디지털과학수사 지원 |
| |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1) | 콘텐츠 창작창업 지역 확산 |
| |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2) | 전문인력양성(스포츠융복합대학원 운영), 전문인력양성(문학관 상주작가) |
| |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2) | 콘텐츠문화광장 운영, 콘텐츠분야 인재육성 |
| | 태권도 진흥(1) | 태권도세계화 |
| |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1) | 학교종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 연구개발(R&D) 29건 |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1) | 국어문화원지원 |
| | 한스타일 육성지원(1) | 한복분야 육성지원 |
| |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1) | AMA장학사업 |
| |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R&D)(1) |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 |
| | 국립도서관 운영(1) | 국립도서관운영 |

| 사업목적 | 사업명(사업 수) | |
|------------------------|--------------------------------|--|
| |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5) | 공공언어 개선 및 여건 조성, 국어문화발전 기초연구, 국어 문화학교 운영, 특수언어 기반 의사소통 환경개선, 한국어교육 선진화 |
| | 뉴스미디어진흥(1) | 연구사업 |
| | 문화기술 연구개발(R&D)(3) | 지능형 문화콘텐츠 창제작기술 개발, 문화산업 선도형 기술 개발, 문화서비스 확산형기술 개발 |
| |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양성(R&D)(3) | 문화기술핵심 인력양성, 문화산업 기술개발, 예술과학융합 인력양성 |
| |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1) | 방송영상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
| | 소프트웨어 저작권 연구개발(R&D)(1) | SW저작권생태계 응용기술 개발 |
| |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1) | 첨단기술기반 산업혁신 |
| | 양성평등 문화 확산(1) | 양성평등문화콘텐츠 확산 |
| |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1) | 저작권서비스 혁신연구 개발 |
| | 전통문화 혁신 성장 연구개발(R&D)(1) | 전통문화 융합연구 개발 |
| |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2) | 한국불교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한국유경정본화DB 및 활용 시스템 구축 |
| | 종교문화활동지원(2) | 청소년인성교육 활성화(기독교), 청소년인성교육 활성화(종교연합) |
| |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R&D)(1) | 지역연계 첨단CT기술 개발 |
| | 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 기술 개발(R&D)(2) | XR콘텐츠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 XR콘텐츠 저작권 관리 및 유통 기술 개발 |
| |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1) | 학술용어 정비사업 |
| | CT기반조성(R&D)(1) | 문화기술연구 주관 기관 지원(연구비) |
|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 3건 |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3) | 경상운영비·시설관리·교육지원 및 운영, 사업비·국내외교류 홍보사업, 인건비 |
| 기타 19건 | 공예관광산업 육성(1) | 공예관광산업 육성 |
| | 국민문화활동지원(1) | 문화가 있는 날 기획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 국민체력인증(1) | 국민체력인증제 운영(민간) |
| | 도박문제 예방치유사업(1) | 도박중독치유 재활 |
| |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1) | 예술메타버스 확장 지원 |
|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1) | 학교예술강사 지원 |
| | 미술진흥기반구축(1) | 공예문화 진흥 |
| |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1) | 대학박물관 진흥 지원 |

| 사업목적 | 사업명(사업 수) | |
|------|---------------------|-----------------------------|
| |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1) | 지역스포츠산업 지원 |
| | 양성평등 문화 확산(1) | 성희롱·성폭력예방 행동강령 개발 |
| | 영상콘텐츠산업 육성(1) |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
| | 예술창작활동 지원(1) | 예술정책사업 지원(문학관특성화) |
| |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2) | 디지털인문뉴딜, 박물관,길위의 인문학 운영 |
| | 종교문화활동지원(1) | 종교문화행사지원(불교) |
| | 지역문화 진흥(2) | 문화자원봉사 사회 확산 지원,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
| |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1) | 학교체육 활성화 |
| |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1) |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지원 사업 |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목록

-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말 발표된 예술정책 종합계획에 포함된 정책전략인 ‘미래예술인재 발굴’에 예술영재 교육을 확대하고 청년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은 반영하고 있으나, 예술대학 운영을 통한 기초인력 육성에 관한 내용은 부재 - 국가의 경제 및 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질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최근의 국가 인재양성 체계가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종합적 예술분야 인재양성 정책은 부재함

〈표 2-7〉 새 정부 문화예술 정책의 미래예술인재 발굴 정책 과제

| 구분 | 현황 진단 | 정책 과제 |
|-------|--|---|
| 예술영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영재 교육 부족) 과학영재 교육*에 비해 국가 단위의 예술영재 교육 규모가 적어** 지리적, 경제적 교육기회의 형평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개 대학 무료(과기부), 20개 이상 대학(교육청) 등 모든 시도에서 과학영재 교육 운영 ** 4개 한예종 영재원 무료(문체부), 15개 대학(교육청) 등 7개 시도에서 예술영재 교육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영재 교육 확대) 미래 예술영재 발굴·양성, 예술영재교육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예술 영재교육 지원 강화 |
| 청년예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예술인 기회 부족) 예술계에 진입하는 청년예술인의 무대 기회가 부족하며, 전업예술인으로의 현장 안착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대학 취업률 62.5%, 특히 음악 전공 53.2%(전체 63.3%), 유직취업률 67.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확대)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단원을 대폭 확대하여 재능 있는 청년예술인에게 공공 무대 기회를 확장하고, 차세대 신진예술인 발굴 • (민간 예술단체의 청년예술인 고용지원) 예술 |

| 구분 | 현황 진단 | 정책 과제 |
|----|------------|----------------------------|
| | (전체 80.3%) | 전문인력에 대한 일자리 지원으로 청년 고용 지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3).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

- 현재 예술분야에 대한 고등교육의 87.6%가 사립대학에 치우쳐져 있어 예술분야 기초인력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³⁾
 - 2023년 기준 전국의 190개 대학⁴⁾에서 운영 중인 학과는 총 12,345개이며, 이중 국·공립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24.6%인데 반해 사립대학은 75.4%에 달하여 공공의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비중은 계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은 계열은 예체능계열(87.6%), 의약계열(86.0%), 사회계열(83.6%), 인문계열(82.2%), 상대적으로 낮은 계열은 공학계열(76.1%), 교육계열(60.8%), 자연계열(59.8%)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기초과학의 기반인 자연계열의 경우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40.2% 수준으로 국가의 책임성이 높는데 반해, 예체능계열의 경우 공공의 책임성이 12.3%로 낮고 그마저도 체육과 응용예술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순수예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예체능계열에 대한 사립대학의 책임성이 높고,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관리하는 국립예술대학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외 없어 예술인재 양성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이에 최근 예술 및 문화콘텐츠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서울예술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KAIST,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주요 대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 중심의 미래인재 양성 계획을 발표(시사미래신문, 2023.5.11.)

3) 2023년 기준 현재 전체 고등교육기관 수는 424개이며, 국립 49개(11.6%), 공립 8개(1.9%), 사립 367개(86.6%)로 고등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4) 일반대학 기준임

〈표 2-8〉 일반대학 운영 학과수 현황(2023년 기준)

| 계열 구분 | 국립(비율) | 공립(비율) | 사립(비율) | 합계 |
|-------|-------------|---------|-------------|--------|
| 총계 | 2,987(24.2) | 53(0.4) | 9,305(75.4) | 12,345 |
| 인문계열 | 280(17.3) | 8(0.5) | 1,326(82.2) | 1,614 |
| 사회계열 | 442(16.0) | 11(0.4) | 2,308(83.6) | 2,761 |
| 교육계열 | 251(39.2) | - | 389(60.8) | 640 |
| 공학계열 | 1,037(32.4) | 18(0.6) | 2,150(67.1) | 3,205 |
| 자연계열 | 669(39.4) | 12(0.7) | 1,015(59.8) | 1,696 |
| 의약계열 | 97(14.0) | - | 595(86.0) | 692 |
| 예체능계열 | 211(12.1) | 4(0.2) | 1,522(87.6) | 1,737 |

주1) 일반대학이란 교육대, 전문대, 산업대 제외한 190개를 의미

출처: 2023 교육통계연보,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 요컨대, 예술분야 기초인력 육성의 상당 부분을 사립대학이 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 학과의 통폐합, 대학재정 악화에 따른 기초학문 및 예술 관련 학과에 대한 투자 감소 등은 장기적 관점에서 예술분야 기초인력 양성을 악화
 - 더욱이 예술인재는 국가적 차원에서 양성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인식보다는 도 제식, 개별적으로 이뤄진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인재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투자 정도가 낮음
 - 순수예술 기초인력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유일한 문체부 산하 고등교육기관으로, 향후 추가적인 예술대학 정책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국가 차원의 순수예술 학과 보존·보호의 노력이 요구됨과 동시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순수예술 분야 기초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

2. 고등교육기관 운영 현황

1) 예술대학의 정의

- 예술대학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각종 예술 분야를 교육하는 독립적인 대학(교)을 의미하며 넓게는 일반종합대학 내 단과대학 유형을 포괄
 - 우리나라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교)은 「고등교육법」에 의거하고 있으며, 대학(교)의 종류는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로 구분함
 - 독립적인 대학(교)으로서의 예술대학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서울예술대학(이하 ‘예술대학’) 등이 있으며, 단과대학으로서의 예술대학은 서울대학교 내 미술대학, 음악대학(이하 ‘예술단과대학’) 등이 대표적임

〈표 2-9〉 예술대학의 유형

| 분야 | 예술대학 | 일반종합대학 내 예술단과대학 |
|------|-----------------------|--|
| 특징 | 예술분야에 특화된 독립적인 고등교육기관 | 모든 학문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종합대학 형태에 소속된 예술 중심 단과대학 |
| 대표사례 | 한국예술종합학교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음악대학 |

- 예술대학이나 예술단과대학 유형 외에도 일반대학(교)의 학과 중심 과정(이하 ‘예술전공 학과’)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은데 학과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 현재 예체능계열은 1,737개가 운영 중(2023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 전체 12,345개 학과 중에서 공학계열(3,205), 사회계열(2,761) 다음으로 많은 게 예술계열(1,737)임
- 지역별, 계열별 분포 및 충원률을 살펴보면 예체능계열 충원률이 타 분야 대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의 예술전공 학과 운영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
 - 전반적인 국민의 예술 향유 및 소비 수준은 증가하는데 반해, 예술을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교육 수요는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

〈표 2-10〉 2023년 기준 전국 대학의 지열별x계열별 충원률(공학, 교육, 사회, 예체능)

| 지역 | 공학계열 | | | | 교육계열 | | | | 사회계열 | | | | 예체능계열 | | | |
|----|------|--------|--------|-------|------|--------|-------|-------|------|--------|--------|-------|-------|--------|--------|-------|
| | 학과 | 정원 | 입학 | 충원율 | 학과 | 정원 | 입학 | 충원율 | 학과 | 정원 | 입학 | 충원율 | 학과 | 정원 | 입학 | 충원율 |
| 강원 | 238 | 3,208 | 3,173 | 98.9 | 47 | 978 | 1,019 | 104.2 | 228 | 2,672 | 2,927 | 109.5 | 92 | 1,079 | 1,117 | 103.5 |
| 경기 | 448 | 15,177 | 17,174 | 113.2 | 58 | 1,016 | 1,112 | 109.4 | 351 | 9,652 | 10,888 | 112.8 | 293 | 7,061 | 7,422 | 105.1 |
| 경남 | 183 | 3,209 | 3,100 | 96.6 | 47 | 1,181 | 1,200 | 101.6 | 103 | 2,270 | 2,303 | 101.5 | 29 | 690 | 689 | 99.9 |
| 경북 | 319 | 7,037 | 7,078 | 100.6 | 65 | 1,446 | 2,218 | 153.4 | 248 | 6,708 | 6,239 | 93.0 | 160 | 3,448 | 2,852 | 82.7 |
| 광주 | 113 | 3,031 | 2,969 | 98.0 | 68 | 1,243 | 1,351 | 108.7 | 96 | 2,552 | 2,559 | 100.3 | 74 | 1,411 | 1,505 | 106.7 |
| 대구 | 48 | 2,050 | 2,247 | 109.6 | 40 | 802 | 866 | 108.0 | 48 | 1,829 | 2,052 | 112.2 | 24 | 965 | 978 | 101.3 |
| 대전 | 187 | 5,458 | 5,845 | 107.1 | 32 | 720 | 755 | 104.9 | 134 | 3,718 | 4,592 | 123.5 | 81 | 2,110 | 2,320 | 110.0 |
| 부산 | 366 | 8,438 | 8,548 | 101.3 | 62 | 1,222 | 1,278 | 104.6 | 407 | 7,757 | 8,542 | 110.1 | 184 | 3,346 | 3,595 | 107.4 |
| 서울 | 510 | 21,644 | 28,184 | 130.2 | 126 | 11,827 | 5,266 | 44.5 | 617 | 43,775 | 33,411 | 76.3 | 423 | 12,607 | 12,186 | 96.7 |
| 세종 | 32 | 1,207 | 1,273 | 105.5 | - | - | - | - | 22 | 756 | 778 | 102.9 | 15 | 386 | 426 | 110.4 |
| 울산 | 33 | 1,382 | 1,539 | 111.4 | - | - | - | - | 17 | 588 | 683 | 116.2 | 20 | 286 | 277 | 96.9 |
| 인천 | 85 | 2,772 | 3,160 | 114.0 | 30 | 891 | 962 | 108.0 | 65 | 1,379 | 1,820 | 132.0 | 22 | 619 | 632 | 102.1 |
| 전남 | 134 | 2,334 | 2,317 | 99.3 | 24 | 359 | 367 | 102.2 | 74 | 1,435 | 1,521 | 106.0 | 25 | 572 | 550 | 96.2 |
| 전북 | 192 | 3,639 | 3,738 | 102.7 | 55 | 1,157 | 1,469 | 127.0 | 143 | 2,700 | 3,191 | 118.2 | 120 | 1,911 | 2,415 | 126.4 |
| 제주 | 33 | 523 | 427 | 81.6 | 15 | 261 | 264 | 101.1 | 33 | 701 | 640 | 91.3 | 21 | 241 | 168 | 69.7 |
| 충남 | 263 | 7,138 | 7,774 | 108.9 | 63 | 1,567 | 1,616 | 103.1 | 266 | 7,348 | 6,846 | 93.2 | 193 | 4,249 | 4,476 | 105.3 |
| 충북 | 162 | 3,879 | 3,768 | 97.1 | 75 | 1,539 | 1,629 | 105.8 | 167 | 3,447 | 3,517 | 102.0 | 104 | 1,964 | 1,954 | 99.5 |

〈표 2-11〉 2023년 기준 전국 대학의 지열별x계열별 충원률(의약, 인문, 자연)

| 지역 | 의약계열 | | | | 인문계열 | | | | 자연계열 | | | |
|----|------|-------|-------|-------|------|--------|--------|-------|------|--------|--------|-------|
| | 학과 | 정원 | 입학 | 충원율 | 학과 | 정원 | 입학 | 충원율 | 학과 | 정원 | 입학 | 충원율 |
| 강원 | 81 | 2,481 | 2,692 | 108.5 | 83 | 2,755 | 2,272 | 82.5 | 188 | 1,688 | 1,776 | 105.2 |
| 경기 | 52 | 1,718 | 1,946 | 113.3 | 243 | 6,189 | 6,820 | 110.2 | 186 | 4,788 | 5,178 | 108.1 |
| 경남 | 35 | 1,715 | 1,799 | 104.9 | 37 | 893 | 921 | 103.1 | 105 | 2,033 | 2,141 | 105.3 |
| 경북 | 82 | 2,703 | 3,098 | 114.6 | 121 | 2,246 | 2,277 | 101.4 | 154 | 2,625 | 2,529 | 96.3 |
| 광주 | 42 | 2,069 | 2,150 | 103.9 | 65 | 1,663 | 1,651 | 99.3 | 66 | 1,597 | 1,702 | 106.6 |
| 대구 | 19 | 941 | 991 | 105.3 | 34 | 1,206 | 1,304 | 108.1 | 50 | 1,662 | 1,774 | 106.7 |
| 대전 | 47 | 1,681 | 2,019 | 120.1 | 75 | 2,813 | 2,025 | 72.0 | 75 | 2,404 | 2,517 | 104.7 |
| 부산 | 61 | 2,122 | 2,224 | 104.8 | 196 | 3,993 | 4,126 | 103.3 | 127 | 2,962 | 2,998 | 101.2 |
| 서울 | 85 | 4,552 | 4,599 | 101.0 | 470 | 36,328 | 20,124 | 55.4 | 295 | 14,671 | 11,110 | 75.7 |
| 세종 | 1 | 30 | 44 | 146.7 | 18 | 129 | 159 | 123.3 | 14 | 280 | 307 | 109.6 |
| 울산 | 3 | 139 | 140 | 100.7 | 10 | 339 | 355 | 104.7 | 16 | 393 | 327 | 83.2 |
| 인천 | 20 | 716 | 816 | 114.0 | 30 | 1,051 | 1,155 | 109.9 | 38 | 785 | 849 | 108.2 |
| 전남 | 22 | 1,099 | 1,174 | 106.8 | 30 | 603 | 522 | 86.6 | 53 | 1,026 | 994 | 96.9 |
| 전북 | 52 | 1,880 | 2,010 | 106.9 | 72 | 2,583 | 1,452 | 56.2 | 100 | 1,749 | 1,872 | 107.0 |
| 제주 | 4 | 140 | 148 | 105.7 | 11 | 202 | 214 | 105.9 | 28 | 477 | 509 | 106.7 |
| 충남 | 74 | 2,868 | 2,944 | 102.6 | 139 | 2,355 | 3,119 | 132.4 | 115 | 2,037 | 2,348 | 115.3 |
| 충북 | 43 | 1,650 | 1,744 | 105.7 | 72 | 944 | 966 | 102.3 | 119 | 1,936 | 2,020 | 104.3 |

2) 예술대학 운영 현황

- 교육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예술대학은 18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⁵⁾ 절반 이상이 입학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

〈표 2-12〉 국내 예술대학 운영 현황(2023년 기준)

| 학교명 | 시도 | 설립 | 학제 | 학과 | 입학정원(A) | 입학인원(B) | 충원율(B/A) |
|--------------|----|-------|-------|-----|---------|---------|----------|
| 계명문화대학교 | 대구 | 사립 | 전문대학 | 16 | 661 | 617 | 93.3% |
| 계원예술대학교 | 경기 | 사립 | 전문대학 | 26 | 1262 | 1244 | 98.6% |
| 국제예술대학교 | 서울 | 사립 | 전공대학 | 3 | 354 | 355 | 100.3% |
| 대구예술대학교 | 경북 | 사립 | 대학교 | 5 | 330 | 67 | 20.3% |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 경기 | 사립 | 전문대학 | 21 | 725 | 913 | 125.9% |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 서울 | 사립 | 사이버대학 | 6 | 990 | 278 | 28.1% |
| 백석문화대학교 | 충남 | 사립 | 전문대학 | 7 | 550 | 522 | 94.9% |
| 백석예술대학교 | 서울 | 사립 | 전공대학 | 10 | 2200 | 2353 | 107.0% |
| 백제예술대학교 | 전북 | 사립 | 전문대학 | 6 | 507 | 428 | 84.4% |
| 부산예술대학교 | 부산 | 사립 | 전문대학 | 10 | 390 | 309 | 79.2% |
| 서울예술대학교 | 경기 | 사립 | 전문대학 | 13 | 547 | 818 | 149.5% |
| 예원예술대학교 | 전북 | 사립 | 대학교 | 11 | 231 | 205 | 88.7% |
| 용인예술과학대학교 | 경기 | 사립 | 전문대학 | 12 | 485 | 411 | 84.7% |
| 정화예술대학교 | 서울 | 사립 | 전공대학 | 18 | 1832 | 1776 | 96.9% |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 경기 | 사립 | 전문대학 | 13 | 937 | 981 | 104.7% |
| 추계예술대학교 | 서울 | 사립 | 대학교 | 10 | 210 | 222 | 105.7% |
| 한국예술종합학교 | 서울 | 특별법국립 | 각종대학 | 25 | 526 | 535 | 101.7%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충남 | 특별법국립 | 대학교 | 1 | 40 | 41 | 102.5% |
| 총계 | - | - | - | 213 | 12,777 | 12,075 | 94.5% |

주: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23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학교명에 '예술' 또는 '문화'가 포함된 예술대학 목록임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2023년 고등 학교별X학과별,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5)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에 따르면 학교명에 '예술'을 포함하고 있는 예술대학은 9개로 집계되지만, 교육통계에서는 학교명에 '예술'과 '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예술대학이 18개로 집계됨

- 일반종합대학 형태의 국립대학에서 예체능계열 학과를 1개 이상 운영 중인 학교는 29개인 것으로 확인되며, 마찬가지로 입학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들이 발생하는 상황

〈표 2-13〉 국립대학 예체능계열 학과 운영 현황(2023년 기준)

| 학교명 | 시도 | 설립 | 학제 | 학과수 | 입학정원(A) | 입학인원(B) | 충원율(B/A) |
|-----------|----|-------|----------|-----|---------|---------|----------|
| 강릉원주대학교 | 강원 | 국립 | 대학교 | 4 | 136 | 128 | 94.1% |
| 강원대학교 | 강원 | 국립 | 대학교 | 20 | 330 | 344 | 104.2% |
| 경북대학교 | 대구 | 국립 | 대학교 | 6 | 234 | 242 | 103.4% |
| 경상국립대학교 | 경남 | 국립 | 대학교 | 4 | 77 | 76 | 98.7% |
| 공주대학교 | 충남 | 국립 | 대학교 | 9 | 224 | 249 | 111.2% |
| 군산대학교 | 전북 | 국립 | 대학교 | 4 | 96 | 99 | 103.1% |
| 목포대학교 | 전남 | 국립 | 대학교 | 3 | 96 | 82 | 85.4% |
| 부경대학교 | 부산 | 국립 | 대학교 | 4 | 118 | 122 | 103.4% |
| 부산대학교 | 부산 | 국립 | 대학교 | 9 | 313 | 349 | 111.5% |
| 서울대학교 | 서울 | 국립대법인 | 대학교 | 11 | 247 | 257 | 104.0% |
| 순천대학교 | 전남 | 국립 | 대학교 | 6 | 127 | 127 | 100.0% |
| 안동대학교 | 경북 | 국립 | 대학교 | 3 | 85 | 74 | 87.1% |
| 전남대학교 | 광주 | 국립 | 대학교 | 5 | 191 | 194 | 101.6% |
| 전북대학교 | 전북 | 국립 | 대학교 | 7 | 155 | 175 | 112.9% |
| 제주대학교 | 제주 | 국립 | 대학교 | 8 | 141 | 143 | 101.4% |
| 창원대학교 | 경남 | 국립 | 대학교 | 6 | 178 | 173 | 97.2% |
| 충남대학교 | 대전 | 국립 | 대학교 | 7 | 188 | 190 | 101.1% |
| 충북대학교 | 충북 | 국립 | 대학교 | 4 | 38 | 39 | 102.6% |
| 한국체육대학교 | 서울 | 국립 | 대학교 | 8 | 445 | 465 | 104.5% |
| 한국해양대학교 | 부산 | 국립 | 대학교 | 1 | 23 | 26 | 113.0% |
| 한국교통대학교 | 충북 | 국립 | 대학교 | 4 | 95 | 114 | 120.0%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서울 | 국립 | 대학교 | 7 | 256 | 292 | 114.1% |
| 한경국립대학교 | 경기 | 국립 | 대학교 | 6 | 112 | 133 | 118.8% |
| 한밭대학교 | 대전 | 국립 | 대학교 | 6 | 128 | 140 | 109.4% |
| 인천대학교 | 인천 | 국립대법인 | 대학교 | 6 | 232 | 239 | 103.0%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서울 | 국립 | 방송통신대 | 2 | 3380 | 711 | 21.0% |
| 한국복지대학교 | 경기 | 국립 | 전문대학 | 4 | 29 | 24 | 82.8% |
| 한국예술종합학교 | 서울 | 특별법국립 | 각종대학(대학) | 25 | 526 | 535 | 101.7%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충남 | 특별법국립 | 대학교 | 1 | 40 | 41 | 102.5% |
| 총계 | - | - | - | 190 | 8,240 | 5,783 | 70.2% |

주: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23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예체능계열(대계열, 국립(설립)을 키워드로 추출한 목록이며, 2023년 현재 운영 중인 학과 수 기준임(입학정원 0명인 학과는 폐과로 간주하여 학과수에 집계하지 않음)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2023년 고등 학교별X학과별

- 지난 10년(2014~2023) 간의 예체능계열 학과 입학자 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디자인, 미술·조형, 무용·체육, 음악(국악, 기악, 음악학, 작곡 등) 같은 순수예술 학과 감소세가 뚜렷
- 반면, 영상·예술, 사진·만화 등 응용예술 계열 입학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음악 중에서도 실용음악학과가 포함되어 있는 기타음악 계열 입학자는 크게 증가

〈표 2-14〉 지난 10년 간 예체능계열별 학생수 추이(입학자 기준)

| 대계열 | 중계열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디자인 | 기타디자인 | 4,815 | 4,368 | 4,782 | 3,863 | 3,700 | 3,716 | 3,871 | 3,997 | 3,908 | 3,913 |
| | 디자인일반 | 2,611 | 2,729 | 2,476 | 3,103 | 2,982 | 2,881 | 2,578 | 2,217 | 2,532 | 2,413 |
| | 산업디자인 | 1,736 | 1,724 | 1,677 | 1,357 | 1,413 | 1,387 | 1,341 | 1,487 | 1,426 | 1,495 |
| | 시각디자인 | 2,088 | 1,993 | 1,919 | 1,859 | 1,853 | 1,795 | 1,825 | 2,207 | 2,089 | 2,203 |
| | 패션디자인 | 1,873 | 1,795 | 1,754 | 1,776 | 1,650 | 1,709 | 1,643 | 1,671 | 1,419 | 1,516 |
| 무용·체육 | 무용 | 1,113 | 1,079 | 1,045 | 969 | 921 | 933 | 923 | 886 | 926 | 921 |
| | 체육 | 10,789 | 10,424 | 9,986 | 9,937 | 9,662 | 9,853 | 9,786 | 10,518 | 10,183 | 10,715 |
| 미술·조형 | 순수미술 | 2,827 | 2,691 | 2,931 | 2,626 | 2,634 | 2,558 | 2,384 | 2,256 | 2,075 | 2,130 |
| | 응용미술 | 386 | 344 | 415 | 379 | 344 | 390 | 382 | 347 | 450 | 344 |
| | 조형 | 956 | 879 | 541 | 617 | 577 | 519 | 516 | 547 | 628 | 707 |
| 연극·영화 | 연극·영화 | 2,753 | 2,816 | 2,694 | 2,476 | 2,503 | 2,435 | 2,479 | 2,379 | 2,476 | 2,273 |
| 음악 | 국악 | 392 | 401 | 436 | 422 | 411 | 409 | 375 | 374 | 364 | 359 |
| | 기악 | 1,701 | 1,763 | 1,758 | 1,674 | 1,701 | 1,676 | 1,627 | 1,496 | 1,422 | 1,323 |
| | 기타음악 | 1,815 | 1,793 | 2,183 | 2,052 | 2,354 | 2,244 | 2,217 | 2,083 | 2,213 | 2,168 |
| | 성악 | 597 | 648 | 651 | 609 | 653 | 661 | 650 | 584 | 551 | 522 |
| | 음악학 | 2,558 | 2,208 | 1,992 | 1,866 | 1,738 | 1,721 | 1,717 | 1,607 | 1,694 | 1,697 |
| | 작곡 | 378 | 361 | 376 | 368 | 350 | 325 | 302 | 298 | 283 | 248 |
| 응용 예술 | 공예 | 756 | 705 | 783 | 878 | 919 | 919 | 880 | 917 | 895 | 771 |
| | 사진·만화 | 1,152 | 1,163 | 1,101 | 1,038 | 1,084 | 1,133 | 1,384 | 1,447 | 1,845 | 2,038 |
| | 영상·예술 | 4,933 | 4,542 | 4,880 | 5,038 | 5,148 | 5,443 | 5,598 | 5,342 | 5,503 | 5,806 |
| 총계 | | 46,229 | 44,426 | 44,380 | 42,907 | 42,597 | 42,707 | 42,478 | 42,660 | 42,882 | 43,562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연도별 고등 학교별X학과별,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3. 국외 예술대학 운영 현황

1) 예술대학 운영의 특징

- 우리나라는 독립적인 형태의 예술대학 운영보다는 일반종합대학 내 예술단과대학 또는 학과 중심의 운영 형태가 일반적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장르 중심의 독립적인 예술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
- 예술분야 고등교육에 관한 사립대학의 비율이 87.6%에 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국에서는 예술인재 양성의 대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차이점
 - 특히 프랑스의 경우 문화부 산하에 45개 예술대학을 두고 국가예술학위인 학사학위(Diplôme national d'art, DNA), 석사학위(Diplôme national supérieur d'expression plastique, DNSEP)를 수여하고 있어, 국가 주도의 예술인재 양성에 대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됨
 - 독일은 52개의 예술대학과 일반종합대학 내 예술 분야 단과대학 등 전역에 56여 개의 예술대학이 운영 중이며,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예술대학의 재정적 지원 및 관리·감독은 지역에 권한이 있음
- 또한, 주요국에서는 미술, 음악, 연극 등 장르를 대표하는 예술대학이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예술대학은 여러 장르를 통합·운영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외에 부재
 - 영국의 런던예술대학교(UAL), 왕립예술학교(RCA), 왕립음악원(RAM)이나 프랑스의 국립음악원, 에콜 데 보자르, 독일의 베를린 예술대학, 뮌헨미술아카데미 등 국가마다 장르를 대표하는 예술학교가 있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됨
 - 반면, 우리나라는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 등 각 장르별 콘서바토리 형식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의 미래예술계를 선도할 예술인재를 양성하기에는 그 규모가 크지 않음
- 한편, 최근 대학의 역할이 학문공동체 형성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 주요국에서는 예술대학에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시회,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을 요구

- 영국 대학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연, 전시회, 박물관 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유료관객 274만 명, 무료관객 1,322만 명인 것으로 추산하며(2022/23 학기 기준),⁶⁾ 지방의회의 문화예술에 대한 재정 투자 여력이 축소되는 상황 속에서도(The Guardian, 2024.1.7.) 대학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음(Rowan King, 2024.6.25.)
- 독일은 개별 연방주 대학법에 기반을 두고 예술대학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대학법에 따르면 예술대학은 예술을 교육,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대중에게 전달, 매개하는 공적 임무가 있음을 규정함⁷⁾
- 이런 독일 예술대학의 공적 임무는 각 예술대학이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 현장의 중심축이자 주요 행위자로 역할 하도록 하는데, 일례로 독일 미술대학에서는 매년 ‘룬드강(Runggang)’이라는 스튜디오 공개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작품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다양한 전시 행사를 기획 및 개최하는 수십 년 동안의 관행이 유지되고 있음
- 독일 음악대학 또한 매년 다양한 콘서트와 음악 행사를 개최하는데, 대부분의 음악대학이 연중 수백 개의 콘서트와 음악 행사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음악을 매개하며 지역사회의 주요 문화예술 매개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음⁸⁾

2) 프랑스 예술대학 운영 사례

- 프랑스는 72개 국립대학을 포함하여 271개의 박사교육원(écoles doctorales), 45개의 국립예술학교, 22개의 국립건축학교, 3,000여 개 사립기관 등 3,500여개

6) 영국고등교육통계(HESA의 “Social, community and cultural engagement: Designated public events by HE provider” 결과를 참고함(업데이트: 2024.4.4.)

7)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함. Wissenschaftsrat(2021), p.21, Kunsthochschulenkonferenz(2024.08.26. 접속), [Themen] Besonderheiten von Kunsthochschulen.

8) 예를 들어, 칼스루헤 음악대학은 매년 400개 이상의 행사를 개최하여 도시와 주변 지역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함. 이 대학은 ‘어린이 음악 축제(Kindermusikfest)’를 통해 매년 대학 캠퍼스에서 3,000여명의 어린이들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music to go’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매 주말에 도시에서 음악을 연주하기도 함.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대학의 경우 재정 및 행정 주체에 따라 국립 학교(école nationale), 지역학교(école territoriale)로 구분

- 국립대학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고등교육으로 국가학위를 수여하며, 그랑제꼴(grandes écoles)이라는 프랑스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엘리트 교육 시스템을 통해 일반대학과 입학전형 방식을 다르게 운영하여 전문인력 교육을 하는데 이 경우에도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국가학위를 수여함
- 전문학교는 3,000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고 2~5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국가학위가 아닌 해당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학위를 수여함⁹⁾

- 프랑스 예술대학은 문화부 산하 45개 국·공립 예술학교(écoles supérieures d'art), 고등교육부 산하 4개 국립고등응용예술학교(écoles supérieures d'arts appliqués), 22개의 국립건축학교(ENSA)가 운영

- 프랑스의 예술학교는 미술 및 시각예술, 음악 및 공연예술, 영화 및 시청각 예술, 문화유산 등 장르별로 구분되고 문화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부로부터 국가예술학위를 수여받는다는 점에서 특징적임
- 또한 고등교육부 산하에 그래픽디자인, 공간디자인, 패션, 공예에 관한 4개의 예술학교(Ecole Boulle, Ecole Olivier de Serres, Ecole Duperré, Ecole Estienne)가 운영되며, 마찬가지로 국가학위를 수여함
- 프랑스 전역에 있는 국립 고등건축학교(ENSA) 20개는 문화부와 고등교육부 공동 소속 및 관리 하에 운영되고, 그 외 스트라스부르 국립고등응용과학연구소(INSa de Strasbourg)와 사립의 파리건축학교(ESA)는 국립대학과 동등한 건축학위를 수여함

- 문화부 산하의 45개 예술학교는 상호 교류와 네트워크를 위한 '국립고등예술학교협회(Association Nationale des Écoles Supérieures d'Art, ANdÉA)'를 구성하여, 교육의 수준을 관리하고 상호 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¹⁰⁾
- 국립고등예술학교협회(ANdÉA)는 문화부 지원을 받아 프랑스 전역에 위치한 45개 예술학교의 정기적인 네트워킹을 주도하며, 변화하는 동시대 예술의 흐름

9)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함. Campus France(<https://www.coree.campusfrance.org/>)

10)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함. ANdEA(<https://andea.fr>)

을 함께 논의하고 예술교육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함

3) 독일 예술대학 운영 사례¹¹⁾

- 독일은 420여 개의 대학교와 650개 이상의 교육 장소, 약 22,000개에 달하는 전공 및 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폭넓고 세분화된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고등교육에서 국공립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임
 - 연방제 국가인 독일의 대학교육은 매우 분화되어 있어 베를린이나 뮌헨 같이 잘 알려진 대도시 이외에도 16개 연방주의 수도와 도시에 우수한 중소규모 대학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음
 - 독일대학총장회의(Hochschulrektorenkonferenz)에서 발간한 자료¹²⁾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독일에 있는 대학은 422개이고, 재정 지원 주체에 따라 273개 대학이 국공립 대학이고, 38개 대학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대학, 111개 대학이 사립대학으로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의 비율은 각각 64.7%, 26.3%임
 - 연방국가로서 교육에 대한 책임과 운영 역시 16개 연방주에 있고 독자적인 대학법(Hochschulgesetze), 예술 및 음악 대학법(Kunst- und Musikhochschulgesetze), 관련 규정 등에 근거를 두고 운영함
- 독일 대학은 전공과정과 교육목적에 따라 크게 일반종합대학(Universität), 예술대학¹³⁾, 전문대학¹⁴⁾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예술대학은 일반종합대학과 동등한 자격으로 운영
 - 2023/24 겨울학기 기준 전체 427개 대학 중에서 일반종합대학교(사범대학, 신학대학 포함)는 131개, 예술대학 52개, 전문대학(행정전문대학 포함) 245개로 각각 31%, 12%, 57%를 차지함
 - 일반종합대학은 인문, 사회, 경제, 법학, 자연과학, 의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11) 독일사례는 아시아문화전당재단 곽소연 과장 자문을 받아 작성함.

12) 독일대학총장회의(Hochschulrektorenkonferenz), 2023 대학통계(Hochschule in Zahlen 2023) (<https://www.hrk.de/themen/hochschulsystem/statistik/>)

13) 예술대학은 음악 및 미술대학(Kunst- und Musikhochschule), 미술아카데미(Kunstakademie), 예술대학교(Hochschule der Künste)을 의미함

14) 전문대학은 응용과학대학(Fachhochschule(FH) 및 Hochschule für angewandte Wissenschaften(HAW))을 의미함

서 폭넓은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개별 전문 분야에 집중한 공과대학, 사범 대학, 신학대학 등도 존재함

- 예술대학은 일반종합대학 내 단과대학이나 학부로 존재하지 않고, 일반종합대학과 제도적으로 동등한 자격을 갖고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며 현재 52개의 예술대학과 일반종합대학 내 예술단과대학인 카셀미술대학, 마인츠 미술대학, 바이바르 바우하우스 대학,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바젤스베르크 영화대학까지 총 56개가 운영

■ 예술대학은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으로 크게 구분되나, 미술, 디자인, 건축, 음악을 비롯한 공연예술, 영화, 텔레비전, 미디어 분야의 다양한 전공과정을 제공

- 독일 예술대학에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예술가로서의 전문적 커리어를 준비하거나 예술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전공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일부 대학은 관련 분야의 이론 전공과정(예술학, 미술사 및 미술 교육, 음악학, 음악사 및 음악 교육,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학 등)도 제공함
- 예술 분야 이론전공은 주로 일반종합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지만, 몇몇 예술대학에서는 이론전공 관련 박사학위과정도 수학할 수 있음

제2절 거시환경 분석

1. 정책적 환경

- 국가 주도의 범부처 협력 미래인재 양성 정책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래예술인재 양성에 관한 내용 및 투자 계획도 일부 발표
 - 사회·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맞춤형 인재양성의 필요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지만, 대학 서열화 및 수도권 집중화, 경직된 학사 체계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로 적재적소에 활용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문제가 있음(교육부, 2020)
 - 2020년 기준 전국의 대학입학 정원이 559,036명인데 반해 수능지원자는 493,433명에 불과해 지방 사립대와 국립대의 미충원 사태가 본격화되었고(고영구, 2021), 동시에 지역대학의 운영 및 재정 위기도 더욱 심각해진 상황임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의 위기는 대학 본연의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밀집 현상과 그에 따른 지방소멸 심화 등 연쇄적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 정부는 미래인재양성 정책과 함께 대대적인 고등교육 지원체계 혁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함
 - 분야별·산업별 미래인재 양성 정책 강화 기조 속에서 미래예술인재 역시 강조되고 있으며,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 투자 계획인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문화 분야에 미래예술인재 양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향후 예술인재 양성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함
- 그동안 부처별·분야별로 수행되던 인재양성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재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관계부처 장관 및 교육계, 산업계, 학문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

재양성정책을 수립 및 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한 인재양성 등 관련한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함(문보은, 2023)

-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의 슬로건은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으로, 과학기술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관한 민관 전문가들의 논의 하에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 분야를 도출하였고¹⁵⁾ 제2차 회의에서는 국무총리 주재로 이공분야, 에코업, 에너지 인재양성 방향을 논의함(교육부, 2023.5.25.)

- 교육부(2023)는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력의 종합적인 인재양성정책 추진 계획인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핵심과제 중 하나로 ‘지역주도 인재양성 기반 조성’을 반영함

■ 보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 지원체계 혁신의 일환으로 고특회계 신설, 글로컬 30, RISE 사업, 교육발전특구와 같은 체질 개선 사업을 시작

- 2019년 대학혁신 제고 및 대학 교육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던 기존의 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역량), WE-UP(여성공학인재) 등 5개 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함(교육부, 2022b)
- 또한 새롭게 제정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시행되며(2023.1.1 시행)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가 설치되었고, 지역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컬(GLOCAL) 30(2023~2026), RISE 사업 등 고등교육 지원 체계 혁신 및 체질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시행 중임
- 신설된 고특회계를 통해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며 2023년 9조 7,427억원에서 2024년 15조 5,339억원으로 그 규모를 확대함(이성은·김흔, 2024)
- 글로컬 30은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 및 대학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30개 지역대학을 선정하여 선정된 대학에 역대 최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임(정영길, 2024)

■ 특히, 2025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RISE(Regional Innovation

15) 5대 핵심 분야는 A(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B(바이오헬스), C(첨단부품·소재), D(디지털), E(환경·에너지)를 의미함

System & Education,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고등교육 지원체계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로 이관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정영길, 2024)

- 이는 ‘지역의 문제와 지역대학의 문제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인식’ 하에 도입한 지역대학 지원 사업으로 대학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등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목표함(정영길, 2024)
- 따라서 개별 대학에 배부하던 기존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RISE 예산으로 일원화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합 이양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재정적·행정적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 이를 위해 17개 시도에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지원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것이 요구됨¹⁶⁾
- RISE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사업 등 5개 사업은 일몰 및 통합하여 추진 예정임
- 또한 지자체 주도 대학-지역 상생발전이라는 RISE 사업 취지에 맞춰 교육부 외 부처별로 추진하던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도 협의를 통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에 단계적으로 편입하여 RISE 사업으로 통합 추진할 계획임(교육부, 2023.5.25.)
- 요컨대, 향후 대학재정지원 방식은 “BK나 GLOCAL처럼 교육부가 대학을 상대로 직접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반지원방식사업과 지자체가 계획하고 선발하여 진행하는 RISE에 의한 지원방식”으로 이원화하여 약 50:50 비율로 균등하게 지원될 예정임(정영길, 2024)

[그림 2-4] RISE 사업 추진체계



16) 2024년 현재 17개 시도 모두 RISE 계획서를 수립 및 교육부에 제출 완료

- 그 외에도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내 교육발전특구 계획이 발표되는 등 지역 중심 대학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
 -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내 교육발전특구를 발표하였는데, 해당 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을 발전시키고 지역우수인재를 양성 및 정주할 수 있도록 총괄 지원하는 것임(정영길, 2024)
 - 지난 2월 교육부는 기초자치단체 20곳, 광역자치단체 6곳 등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대학 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한 바 있음(김용, 2024)
- 문화 분야 역시 지역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대학의 역할이 인재를 양성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청년예술인의 정주여건 마련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김규원 외, 2022)
 -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정책 하에 문화 분야 역시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예산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지역예술인재가 부족하여 정책 방향과 현장 상황 간의 괴리가 상당함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대학과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한 김규원·김소연·변지혜(2022)의 연구에서는 지역대학이 청년인구를 정주시킬 수 있으므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동시에 문화 분야에 한하여 대학과 지역사회 간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화 분야 매개인력(정책·기획·행정) 양성의 중요함을 강조함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대학의 예술인재 양성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2. 경제적 환경

- 장기적 관점의 잠재성장률 둔화 및 정부 재정여건의 지속적인 악화에 따라 팬데믹 이후 긴축재정 기조를 지속할 계획이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영역에 관한 투자는 유지할 전망
 - 금년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고금리, 수출 부진의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전망(주오이시디, 2024a)
 -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잠재성장률은 둔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부의 재정 세입 여건 악화 및 복지지출 확대(고령화로 인한 돌봄예산 등)가 필요해 불요불급한 영역에 대한 재정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그동안 문화 분야는 타 영역 대비 공공지출 투자에 관한 필요타당성과 사회적 효용이 낮아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예산 삭감의 1순위 분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연관산업의 동반성장과 경제적 파급력이 확대되며 공공지출 투자가 점차 확대
 - 특히, 문화 분야에 대한 공공지출은 더 이상 사회적 비용이 아닌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재정투자의 영역으로 크게 변화
- 2022년 기준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하며, 성과 유지를 위한 관련 정부재정의 규모 확대 및 정책금융 고도화 계획
 - K-팝, K-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대에 따라 한국의 콘텐츠 산업은 151조 1천억 원(전년 대비 9.9% 증), 수출액 132억 4천만 달러(전년 대비 6.3% 등)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임
 - 콘텐츠 산업의 성장은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가져오기에 특히 중요한데,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화장품, 식비 등 소비재 수출을 1억 8천만 달러 견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함(한국수출입은행, 2022)
 - 이에, 정부는 최근 콘텐츠 산업을 미래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발

표하고, K-콘텐츠복합문화단지 조성, 대규모의 정책금융 투자 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콘텐츠 산업의 외부효과(spillover)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방향을 강화함

- 문화를 중심으로 한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효과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창의경제(creative economy) 경향과도 맞물리며, UNEN 등에서는 창의경제를 국가 및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의 하나로 주목하기도 하였음
- 정부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부처간 협업 예산을 확대하고, 특히 수출동력으로서의 투자 기조를 확립
 - 2025년도 문체부 예산안 발표자료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과 연관산업이 가져오는 경제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임을 발표하고,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업 계획을 포함(문체부, 2024.8.28.)
 - 변화한 환경 속에서 콘텐츠 산업의 기초인 '순수예술'에 대한 투자가 더욱 중요한데,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콘텐츠가 전방산업(forward)이라면 그 이면의 순수예술은 후방산업(backward) 영역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임
 - UNCTAD에서도 창의경제가 다른 산업의 생산성과 성장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인정하며(inter-industry spill-over impacts of the creative economy), 전후방산업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음(UNCTAD,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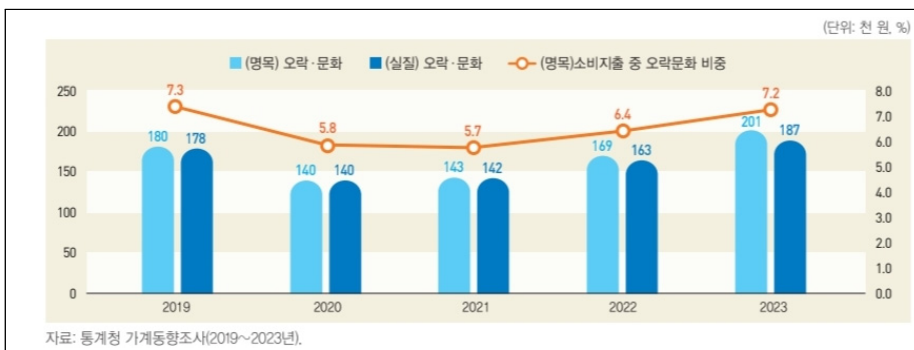
[그림 2-5] 지속가능발전(SDGs)에 기여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 유형



출처: UNEN(2023a). New Economic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etting a Path Towards New Economic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 Overview.

- 문화예술 분야의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후방산업 영역, 즉 순수예술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
 - 이처럼 문화예술과 관련한 전후방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투자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특히 순수예술 등 후방산업 영역 활성화를 위해서 예술인재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 그러나 현재 정부의 미래예술인재 육성의 방향은 어린이·청소년 육성에 집중되어 있어 고등교육을 통한 기초인력 육성 계획은 상대적으로 소홀함
- 한편, 문화부문에 대한 지출은 의식주와 달리 필수 지출이 아니기에 가구별 경제상황이 악화될수록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인다는 기존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가 확대되는 추세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가구당 월평균 오락·문화 지출은 2019년 180천원(월평균 소비지출의 7.3%)에서 2023년 201천 원(월평균 소비지출의 7.2%)으로 회복하였고, 물가 변동을 제외한 실질 소비지출을 보면 2019년 178천원에서 2023년 187천원으로 증가함(이정은, 2024)
 - 연령별로 살펴보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젊은 세대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36천원(전체의 9.0%)으로 문화서비스, 단체여행비, 운동 및 오락서비스 순으로 높은 반면, 60세 이상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29천원(전체의 6.3%)으로 단체여행비, 문화서비스, 운동 및 오락서비스 순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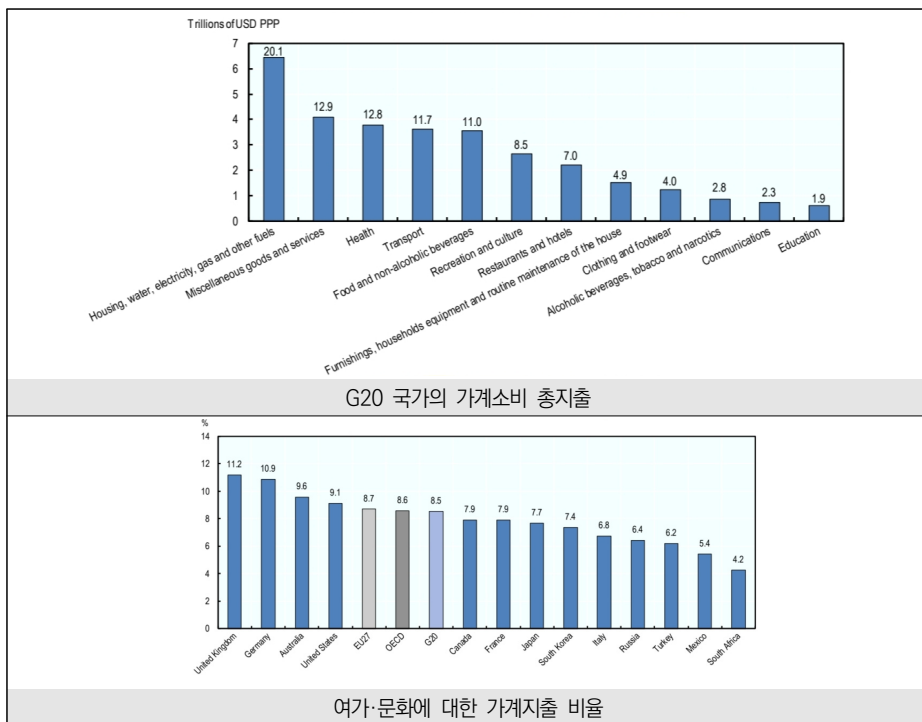
[그림 2-6] 오락·문화 지출 금액 및 소비지출 중 오락·문화 지출 비율(2019~2023년)



출처: 이정은(2024), 가계동향조사(2019~2023년)를 통해 본 가구의 오락·문화 지출 변화 (통계프리즘, 2024년 여름호)

- 다른 나라와 비교해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G20 국가의 문화·오락 지출 평균(8.5%)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 7.4%이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문화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OECD, 2021)

[그림 2-7] G20의 국가별, 유형별 가계소비 지출 현황(2019년 기준)



주) G20 countries with available data,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출처: OECD(2021).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Note for Italy G20 Presidency Culture Working Group

3. 사회적 환경

- 지난 수십 년 동안 OECD 국가들의 출산율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왔지만(1960년 3.3명→2022년 1.5명), 합계출산율이 1명이 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 OECD 38개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960년 3.34명에서 2022년 1.51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6명에서 0.78명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이 넘지 않는 국가임(OECD, 2024)
 - 이러한 세계적 현상에 대해 ‘최근 젊은 남녀 모두 부모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삶에서 더 많은 의미를 찾고 있으며,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을 수용하는 분위기도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함(OECD, 2024)
 -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50년 동안 세계인구가 25% 증가하는 동안 우리나라 인구는 31% 줄어든 것이라 전망하며(통계청, 2024b), 미래 사회 위기대응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함
 - 이처럼 지속적인 인구감소, 특히 청년 및 생산인구감소는 노동인구 부족, 재정 부담 확대, 지방소멸 가속화 등 연쇄적인 사회문제와 관련되어 국가의 당면과제로 크게 부상한 상황임
 - 또한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인재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동시에, 문화예술 분야 역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예술인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지역예술생태계의 조성 및 발전에도 큰 장애로 부상함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중심의 교육 여건 악화 및 핵심인재 유출 문제 확대
 -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세는 미래의 학령인구 감소와도 관련되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한 미충원 사태, 대학재정의 악화 및 교육투자 감소, 고등교육 생태계 불균형의 악순환을 야기함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5~64세 기준 55%(평균 41%), 25~34세 기준 70%(평균 47%)로 OECD 평균 대비 높은 편이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학생 1인당 공교육비)은 평균 20.4천 달러 대비 낮은 13.6천 달러 수준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개인의 재정부담률이 상당함을 시사함

〈표 2-15〉 OECD 국가 고등교육 이수율

(단위: %, %p)

| 기준연도 | 구분 | 25-64세 | 25-34세 |
|------|------------|---------------|---------------|
| 2023 | 한국 (변화) | 54.5 (1.7) | 69.7 (0.1) |
| | OECD | 40.7 | 47.4 |
| 2022 | 한국 | 52.8 | 69.6 |
| | OECD | 40.4 | 47.2 |

〈표 2-16〉 OECD 국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단위: \$(PPP) %, %p)

| 기준연도 | 구분 | 초등교육 | 중등교육 | 고등교육 | 초등-고등교육 |
|------|------------|-------------------|-------------------|---------------------------|-------------------|
| 2021 | 한국 (변화) | 14,873 (1,595) | 19,229 (2,261) | 13,573 (1,347) | 15,858 (1,745) |
| | OECD | 11,902 | 13,324 | 20,449 | 14,209 |
| 2020 | 한국 | 13,278 | 17,038 | 12,225 | 14,113 |
| | OECD | 10,658 | 11,942 | 18,105 | 12,647 |

출처: 주오이시디(2024a). 한눈에 보는 교육 2024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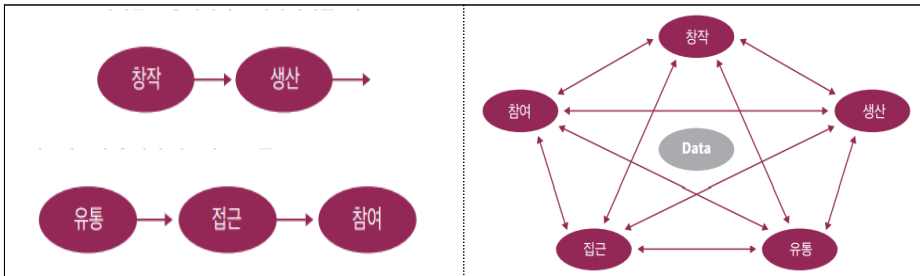
- 한편, 관광과 연계된 문화 자원은 지역의 매력도(attractiveness) 증진의 중요 요소로 인식
 - OECD가 발표한 ‘Regional Outlook 2023’에서는 소득 및 인구, 의료 및 교육 서비스, 디지털 인프라 등이 대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어 자국 내 지역간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별 균등한 공공서비스 보장, 지역의 생산성 제고 및 고용기회 확보, 거버넌스의 질 향상과 공공부문(특히,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등의 정책 필요성을 제시함(OECD, 2023)
 - 관련하여,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49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RDCP)에서는 주요 현안사항으로 ‘장소기반 정책(place-based policies for the future)’의 중요성을 논의함
 - 이에 OECD 지역 고용 및 경제 개발 프로그램(Local Employ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Programme, LEED)에서도 고용과 경제발전을 위한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최근의 LEED 보고서 시리즈에서 문화와 관련된 국가별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임(황아람, 2024)
- 또한 전 영역에서의 빅블러(Big Blur) 현상이 지속되어 융합인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교육의 방향도 단선적인 교육체계를 벗어난 융합교육 체계로 돌입
 - 정보통신기술의 일상화로 생산자-소비자, 온라인-오프라인, 제품-서비스 간 경계가 융화되는 빅블러 현상(Big Blur)이 산업계 전반에 만연해지며¹⁷⁾, 문화의

17) 빅블러 현상은 미래학자 스탠 데이비스의 저서 「블러: 연결 경제에서의 변화의 속도」에서 등장한 개념

가치사슬 역시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모델에서 네트워크 모델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유네스코, 2018)

- 이에 산업계 전반적으로 융합인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경직된 교육체계로는 융합인재 육성의 한계가 존재,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교육과정의 유연성(flexibility)과 자율성(autonomy)이 필요함을 제시함(OECD, 2024a)
- 이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성장형 사고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변화한 환경에 맞춘 유연한 교육과정 개편이 요구됨
- 향후 문화 분야 교육 역시 예술가, 매개자 및 지원인력 등 교육대상 간, 그리고 장르 간 분절적 교육이 아닌 융합교육으로의 개편이 필요함

[그림 2-8] 문화가치사슬의 변화(파이프라인 모델에서 네트워크 모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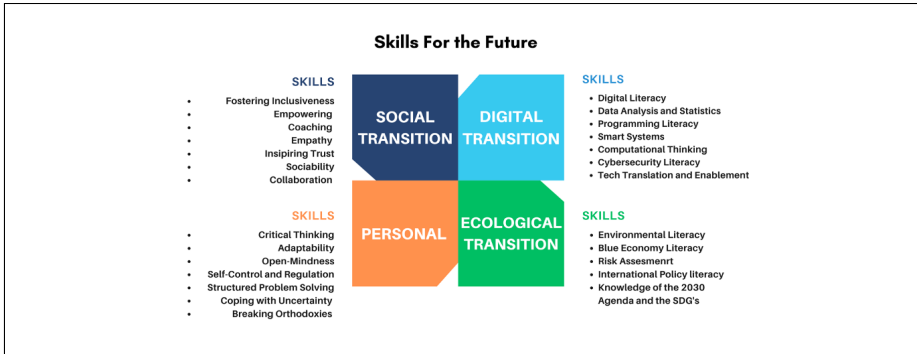


자료 : 유네스코(2018),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글로벌 리포트』, pp.78-79

4. 기술적 환경

- 앞서 기술한 빅블러(Big Blur) 현상은 일상화된 디지털 기술로부터 야기되는 현상으로, 문화생태계부터 교육시스템까지 전 영역에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
 - 팬데믹 이후의 디지털 뉴노멀은 예술창작과 문화소비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예술과 기술을 접목하는 시도들 속에서 생산자, 매개자, 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blur)이 두드러지는 환경을 제공함
 -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영화, 음악, 독서, 운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박물관·미술관, 공연장, 영화관 등 문화시설을 통해서만 향유 가능하던 예술활동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향유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
- 공교육에서는 디지털 교육혁신을 접목하기 위한 에듀테크를 강조하고 있고, 관련한 정부의 재정투자도 예고된 상황
 - 디지털 혁신이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공교육에도 디지털 교육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AI 교과서 도입,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위한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신설하여 2024년 기준 5,333억 원을 편성
 - 2025년부터는 AI 교과서를 영어, 수학 등 일부 과목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학생의 학습역량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의 종이 교과서는 보조도구로 활용할 계획
 - 이러한 공교육의 변화와 함께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미래세대가 향후 고등교육,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사회에 많은 영역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이처럼 디지털 기술로 인해 높아진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고등교육은 비판적 사고, 적응력, 회복력, 창의성 함양 등이 중요(UNESCO IESALC)
 - 디지털 기술로 인해 높아진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네스코(UNESCO IESALC)는 미래 고등교육에 비판적 사고, 적응력, 회복력, 창의성 등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그림 2-9] 미래시민에게 요구되는 역량



자료: UNESCO

- 그러나 문화예술은 노동집약적 특성을 갖고 있기에 생산과 소비 측면 모두에서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이 어렵고, 특히 일부 순수예술 분야는 실연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면교육이 필수적
 -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만연한 시대에 예술교육은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 증진에 도움이 되지만, 미술이나 음악 등 물리적 환경이 전제되어야 하는 예술활동에 있어 디지털 교육은 제한적
 - 특히 협업이 전제되어야 하는 합주, 무용, 연극과 같은 일부 장르는 디지털 교육 보다는 대면교육이 효과적

제3절 예술환경 분석

1. 예술계 산업구조

- 창의경제(creative economy)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이자,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지속가능개발(SDGs)에 대한 기여가 상당한 영역으로서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로 주목
 - 창의경제에 대한 정의는 국가 및 국제기구마다 조금씩 상이하긴 하나, 창의성(creativity)과 지적 자본(intellectual capital)을 주요 투입물로 하는 상품 및 서비스(goods and services)로서 광고, 건축, 미술(arts), 디자인, 음악, 영화, 출판, 비디오 등을 포함(UNCTAD, 2024)

〈표 2-17〉 주요 국제기구의 문화 및 창조경제의 범위

| 개념 | 분류체계 | 범위 | 해당 산업 |
|--------|--|-----------------------|---|
| EU | 문화·창의부문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 NA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CE 4(digit level)에서의 25개 산업(문화·창의부문) • 핵심문화: 문화교육, 박물관 및 유적지, 도서관 및 아카이브, 시각예술 및 문학(writing), 공연예술 • 문화산업: 라디오, TV, 음반, 시청각, 출판, 문화제조(공예), 인쇄 • 창조부문: 광고, 디자인, 건축, 비디오게임 |
| IDB | 오렌지 경제 (orange economy) | ISIC 개정판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예술활동: 시각예술, 공연예술 • 창의산업: 공예, 인쇄, 시청각예술, 인테리어 디자인 등 • 지원활동: 제품디자인, 마케팅 등 |
| UNCTAD | 창의경제 (creative economy) | ISIC 개정판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IC 4(digit level)에서의 54개 산업 • 일부 창의상품의 제조에 기여하는 추가적인 21개 산업 • 창의산업: 광고 및 마케팅, 건축, 시청각예술, 멀티미디어, 출판, 그래픽 및 패션 디자인, 공예 및 제품 디자인, 음악, 공연 및 시각예술,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컴퓨터 및 웹서비스, R&D |
| UNESCO | 문화산업 (cultural industries) | ISIC 개정판 4, CPC 개정판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문화 영역: 문화 및 유적지, 공연예술, 시각예술 및 공예, 출판 및 인쇄, 시청각예술, 디자인 • 관련 영역: 관광, 스포츠 및 여가 |

| 개념 | | 분류체계 | 범위 | 해당 산업 |
|------|----------------------------------|------------|--|--|
| WIPO | 저작권 산업 (copyright industries) | ISIC 개정판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IC 4(digit level)에서의 40개 산업(핵심 저작권 산업) • 28개의 일부 저작권 산업 • 21개의 상호의존적인 저작권 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저작권 산업: 출판 및 문학, 음악, 연극, 오페라 등 • 일부 저작권 산업: 의류, 섬유산업, 신발, 주얼리 등 • 상호의존적 산업: TV, 라디오 등의 제조, 도매, 소매 등 |

자료: UNCTAD(2022). Advancing the measurement of the creative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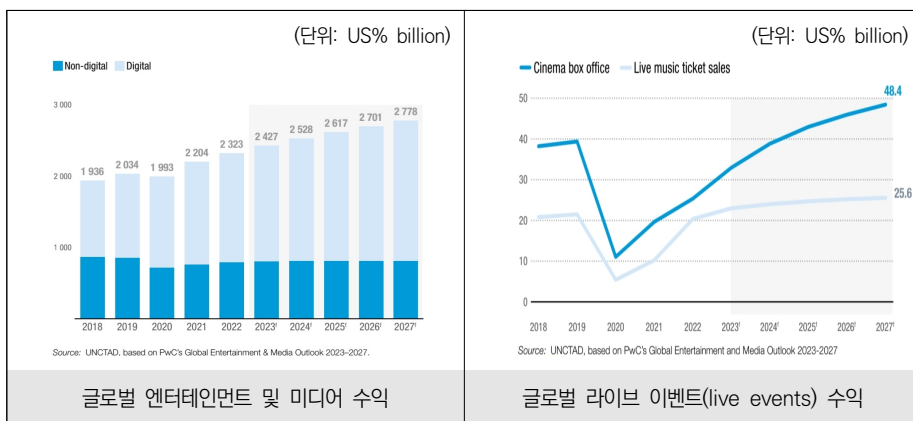
- G20은 문화·창의 부문(cultural and creative sectors)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와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사회적 통합, 지역의 사회적 자본 형성 등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공감하며, 2020년부터 매년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함(OECD, 2021)
- UNEN 역시 지속가능발전(SDGs) 달성을 위한 새로운 경제 모델인 NESD(New Economics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제시하며, ‘오렌지 경제(orange econmony)’로도 알려진 창의경제(creative economy) 모델을 새롭게 제시함(UNEN, 2023a)
- 또한 UNEN은 창의경제의 핵심에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창작-생산-분배의 사이클을 형성하는 ‘문화산업(creative industries)’이 있음을 언급하며, 전통적 예술분야와 더불어 기술집약적 영역(technology-intensive)과 서비스 기반 영역(services-oriented)까지 관계됨을 천명함(UNEN, 2023b)
- 호주와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문화산업(creative industry)을 문화와 예술로 간주하지만, 미주개발은행(IADB)에서는 인접 분야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일각에서는 저작권에 기반한 ‘콘텐츠 산업’의 의미로도 사용함(UNCTAD, 2022b)
- 실제로, 문화산업(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의 연간 수익은 전 세계적으로 약 2조 3,000억 달러로 글로벌 GDP의 3.1%에 달하는 수준이며(UNESCO, 2022a, 2023; UNCTAD, 2024), 글로벌 고용률에는 약 6.2%를 차지함(UNESCO, 2022a; UNCTAD, 2024)
 - UNCTAD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창의경제는 GDP의 최소 0.5%에서 최대 7.3%, 고용률의 최소 0.5%에서 최대 12.5%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고18), 70% 이상의 국가에서 창의경제 증진을 위한 국가적 계획(plan, strategy, policy)을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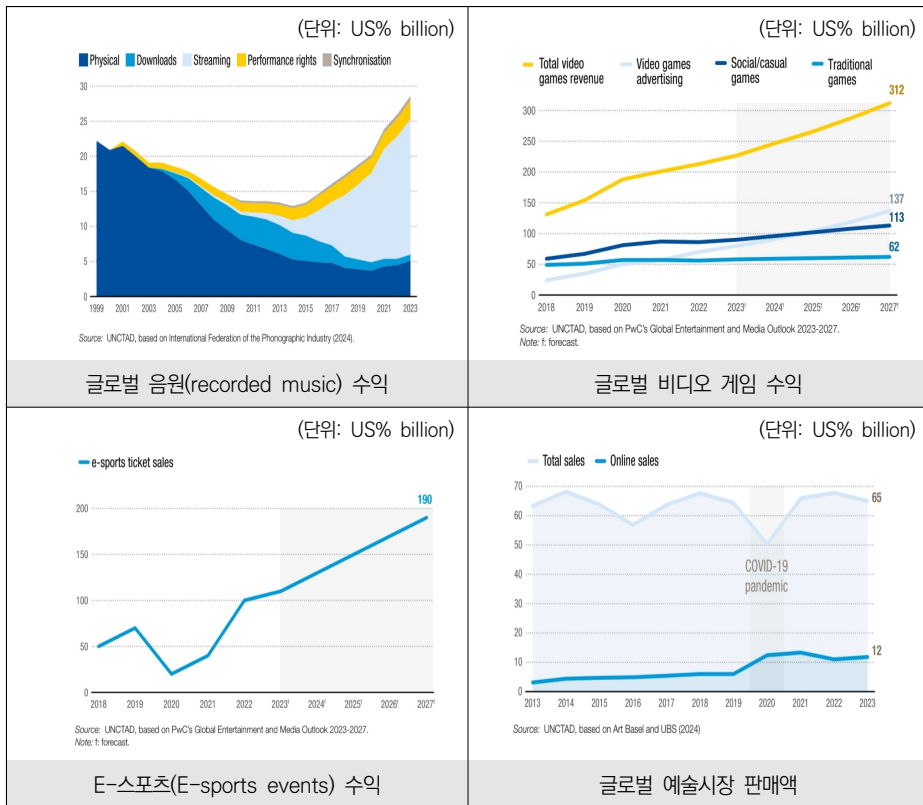
- 이처럼 창의경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 정치, 경제적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전방위적으로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UNCTAD, 2022)

- 또한 문화·창의 부문(CCS)은 그 자체로서 가진 가치뿐만 아니라 후방산업(upstream production)을 이끄는 경제 부문의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s)를 지니는 영역으로 강조(OECD, 2021)
- 이에 문화·창의 부문(CCS)이 가진 잠재적 영향력과 연관산업에 대한 견인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global guidance)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고, UNCTAD(2024)는 해당 부문 산업측정 기준(measurement framework)을 변경
 - 또한 문화·창의 영역이 가진 경제적·사회적 효과로 인해 주요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비용이 아닌(not simply a cost) 경제적·사회적 투자의 영역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음이 제안되기도 하였음(OECD, 2021)

[그림 2-10] 창조경제의 주요 분야별 글로벌 수익 및 판매 현황



18) 국가마다 창의경제를 정의하는 바가 달라 완전한 비교 분석은 어려움(UNCTAD,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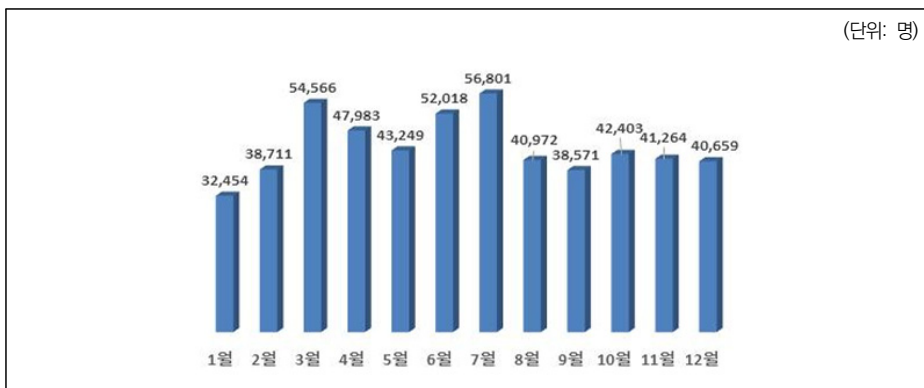
자료: UNCTAD(2024). Creative Economy Outlook 2024, figure 2, 4, 7, 8, 9, 10

2. 예술계 노동구조

- 예술계 노동구조는 불안정한 고용과 불규칙한 소득을 특징으로 하며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일반적
 - 유네스코가 1980년 채택한 예술가 지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에 따르면 예술인은 프리랜서, 계약직 등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대부분임(UNESCO, 2019)
 - 우리나라 예술인실태조사에서도 전업 예술인의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비율이 72.5%(2015년), 76.0%(2018년), 78.2%(2021년)로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예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적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예술계 노동구조는 전문예술가(specialist artists), 지원 전문인력(support staff and workers), 유사 연계 종사자(embedded creator)까지 확대되고 있어, 실제로 예술과 관련된 노동인구 규모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움
- 전체 산업별 취업자 중 문화예술 분야 취업자는 1.8%를 차지하는 수준이고, 월별 일자리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상황(문화체육관광부, 2024)
 - 통계청의 고용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취업자는 512천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취업자의 1.8%를 차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음(통계청, 2024a)
 - 또한 매년 실시하는 문화, 스포츠, 관광 분야 산업현황 조사에 따르면 관련 종사자는 약 145만 명이며, 문화산업 92만 명, 관광산업 35만 명, 스포츠산업 30만 명으로 문화산업 종사자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문화체육관광부, 2024)
 - 또한 전체 46만여 개의 관련 사업체 중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가 41만 여개로 전체의 89.5%를 차지해 영세한 사업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월별 일자리 취득 현황이 불규칙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11] 2021년 기준 일자리 취득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1년 기준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문화예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방향 설정 연구

제3장

예술인재 양성 정책 방향

제1절 기본 방향 및 전략 도출

1. 기본 방향 도출

1) 분석 종합

- 앞서 우리나라의 예술인재 양성 정책 및 예술대학 운영 현황, 인재양성을 둘러싼 정치·경제·사회·기술 등 거시환경 분석과 예술계 내부의 산업·노동·소비 측면에서의 주요 요인을 검토
 - (정책적 요인) 범정부 협력 미래인재 양성 정책 추진, 고특회계 신설 및 RISE 사업 본격화 등 고등교육 지원정책 혁신, 지역대학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지향
 - (경제적 요인) 잠재성장률 둔화 및 긴축재정 운용 기조 유지, 역대 최대 규모의 콘텐츠 산업 매출액·수출액 달성, 연관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 요인) 인구성장률 및 학령인구 감소, 전 영역의 빅블러(big blur) 현상 지속, 문화소비 증가
 - (기술적 요인) 디지털화와 생성형 AI의 진화, 디지털 격차, 디지털 기반의 문화 분야 글로벌 공급망 변화
 - (산업 측면) 창의경제(creative economy)에 대한 재인식, 문화·창의 부문 산업 세분화
 - (노동 측면) 비정형적 노동형태, 숙련된 고급인재 요구, 연관산업 고용 증가에 영향
- 예술인재 양성 정책에 관한 거시환경 및 예술계 내외부 주요 요인을 연계한 분석을 통해(PESTxSWOT), 현안 사항을 진단하고 주요 시사점 및 정책 전략을 도출
 - (강점 요인) 국가 주도 국립예술대학 운영 성과 달성(한국예술종합학교), 산업

- 규모 및 소비지출 증가 등 문화·창의 부문에 대한 대내외적 중요성 증가
- (약점 요인) 국가 주도의 종합적 예술인재 양성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 산업구조 복합화(전·후방 산업)에 따른 효과 측정 어려움, 빅블러 현상 등 변화에 따른 융합형 인재 및 고숙련 인력 요구
 - (기회 요인) 고등교육 혁신 등 미래성장을 주도할 인재양성 정책 강조, 고특회계 및 RISE 사업 등 고등교육 지원체계 개편, 지역 중심의 고등교육 지원 정책 지향 및 지역대학-지역산업 연계 동반성장 강조
 - (위협 요인) 인구감소·지방소멸에 따른 지역예술대학 운영 난항, 지역의 예비예술인 정주여건 열악 및 자생적 예술생태계 조성 한계

〈표 3-1〉 예술인재 정책 PEST x SWOT 분석

| 구분 | 내부요인(Internal factors) | | 외부요인(External factors) | |
|----------------|----------------------------|-------------------------------------|-------------------------|------------------------------|
| |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기회(opportunity) | 위협(threat) |
| 정책(Politic) | • 국가 주도 국립예술 대학 운영 성과 달성 | • 종합적·체계적 예술 인재 양성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인식 미비 | • 고등교육 중심의 인재양성 정책 강조 | • RISE 도입으로 기존 LICK 3.0 등 일몰 |
| 경제(Economic) | • 대내외적 문화분야 산업 규모 확충 | • 예술산업 효과 측정 난항 | • 고등교육 재정혁신을 위한 고특회계 확대 | • 고등교육 재정지원 주체 이관(중앙→지역) |
| 사회(Social) | • 예술향유 다양화 및 소비지출 증가 | • 빅블러 현상에 따른 융합형 인재 요구 | • 지역 중심 고등교육 지원 정책 지향 | • 지역예술대학 통폐합 및 인재유출 가속화 |
| 기술(Technology) | • 디지털화에 따른 문화분야 글로벌 공급망 재편 | • 고숙련 기초인력 필요성 증가 | • 지역대학-지역산업 연계 동반성장 강조 | • 도제식 교육으로 미래 수요 적시 대응 난항 |

|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기회(Opportunity) | 위협(Treats) |
|--|---|---|---|
| ①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성공 경험 ② 문화 분야에 대한 대내외적 중요도 확대 ③ 예술산업 규모 및 소비지출의 확대 | ① 체계적 인재양성 필요성 인식 미흡 ② 산업구조의 복합화 ③ 전후방산업 연계 및 기술 관련 고숙련 인재 요구 | ① 범부처 협력의 인재양성 정책 강조 ② 고특회계 신설 등 고등교육강화 정책 본격화 ③ 지역중심 대학혁신 강조 | ① 학령인구 자연감소와 지방대 위기 ② 지역예술대학 통폐합 등 운영 위기 ③ 예술인재의 지역정주여건 악화 및 인재유출 가속화 |

2) 주요 시사점

- (예술대학 활성화 정책 필요) 대내외적으로 창의경제 및 문화산업의 중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후방산업 모든 영역에서의 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순수예술 분야 기초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 기반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 콘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과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역예술대학 운영 기반이 악화됨에 따라 예술인재 양성의 한계에 맞닥뜨린 상황임
 - 또한 현재의 예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대부분이 일시적·단기적 형태의 전문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고등교육기관 중심의 기초인력 육성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예술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이 높은 편이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미술 등 장르별 콘서트토리 형태의 예술대학 운영 형태가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인 점을 참고하여 제2, 제3의 국립예술대학 설립이 필요함
- (종합적 인재양성 정책 수립 필요)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예술계를 선도할 전략적 인재양성 정책 수립이 요구되나, 어린이·청소년 중심 예술영재교육이 강조되는 것과 달리 대학 중심의 기초인력 양성에 대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저조
 - 그동안 예술대학 지원 정책은 「문화비전 2030」, 「새 예술정책」,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등을 통해 언급되어 왔지만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되지 못한 상황임
 - 예술영재교육과 청년예술인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래예술인재 양성 정책의 중요성은 인식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에 관한 정책을 보완하여 조기교육-고등교육-전문교육-평생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주기적 예술인재 양성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지역예술대학 상생 방안 모색) 현재 예술대학 운영 주체는 국·공립에 비해 사립대학의 비중(87.6%)이 훨씬 높은 상황이므로, 사립대학 운영 및 재정 위기에 대비한 순수예술 학과 중심의 보존·보호 필요성 증가
 - 그동안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추진 하에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은 통폐합의 1순위 분야로서, 특히 순수예술 학과들은 취업에 용이한 융합예술 학과로 명칭

을 변경해왔고 그 결과 예술생태계 기반인 기초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음(한국 대학신문, 2024.5.13.)

- 기초인력 육성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예술대학을 중심으로 융복합 및 폐과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예술계를 선도하는 미래예술인재 양성의 한계로 작용함
- (현장수요 기반 예술인재 육성) 지역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도 졸업 이후 서울로 상경하여 예술활동을 영위하는 행태가 지속되며 지역에 정주해 예술활동을 이어나는 예술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어 지역사회 자체적인 예술생태계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수요 및 정주여건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
- 현행 교육은 많은 부분 도제식 교육체계의 관행이 남아 있어 예술전공생이 직업적 전문인력으로서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특히 지역의 예술전공생은 졸업 이후 지역에 정주해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서울로 상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의 일자리 및 현장 예술활동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이 요구됨

2. 정책 전략 도출

- (역량확대 방향) 미래예술인재 육성을 위한 제2국립예술대학 설립
 - 문화예술에 대한 대내외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미래예술인재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제2국립예술대학 설립을 통한 대학 중심의 문화예술 분야 기초인력 육성 방안을 모색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을 통해 국가의 예술경쟁력에 이바지하는 분야별 우수 예술인재 육성의 경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예술대학 설립 방안을 검토함
- (기회활용 방향) 미래 예술수요를 고려한 종합적·체계적 예술인재 양성 정책 수립
 - 예술을 중심으로 한 관련 산업 규모 및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그 양상도 다변화되고 있으므로, 미래 예술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주기적 예술인재 양성 정책

설계를 통한 전략적 육성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증가함

- 특히 경직된 고등교육 체계와 관행적인 도제식 교육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예술의 양상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검토함

■ (선택집중 방향)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예술대학 간 연계·협력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예술분야 기초인력 양성의 어려움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예술대학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수도권 소재 주요 예술대학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증가함
- 이에 지역예술대학 간 네트워크 체계를 형성하여 교육과정을 상호 교류하는 등 질적 제도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약점보완 방향) 대학-지자체-문화시설·단체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문화예술 계약학과' 등 운영 도입 검토

- 지역예술대학 운영 위기, 지역 예술인재 양성 난항, 지역 예술생태계 조성 한계 등 연쇄 작용으로 인해 거시적인 관점의 지역예술 정책에도 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예술대학 및 예술생태계 활성화의 동반 성장을 위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수요에 기반한 예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문화시설 및 예술단체에 연계 고용될 수 있도록 계약학과 운영 도입을 검토함

〈표 3-2〉 예술인재 양성 정책 전략 도출

| | 강점 | 약점 |
|----|---|--|
| 기회 | [SO: 역량확대] 예술인재 육성을 위한 제2국립예술대학 설립 | [WO: 기회활용] 미래 예술수요를 고려한 종합적·체계적 예술인재 양성 정책 수립 |
| 위협 | [ST: 선택집중]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예술대학 간 연계·협력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 | [WT: 약점보완] 대학-지자체-문화시설·단체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문화예술 계약학과' 등 운영 도입 검토 |

제2절 국립예술대학 설립 방향

1. 배경 및 필요성

- 문화·창의 부문(CCS)이 가진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필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
 - G20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회복에 대한 문화·창의 부문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2020년부터 매년 문화를 의제로 한 문화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2020), 이탈리아(2021), 인도네시아(2022), 인도(2023), 브라질(2024) 회의를 진행함
 - 2021년도 채택한 ‘G20 문화장관 로마선언문(Rome Declaration of the G20 Ministers of Culture)’에는 5가지 주요 우선순위 중 하나로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Building Capacity through Training and Education)’를 포함
 - 구체적으로 전문인력(cultural and creative professionals)을 대상으로 창의(creative), 디지털(digital), 기술(technological), 관리(managerial), 접근성(accessibility-related), 매개(mediation), 환경(environmental) 등을 포함한 새롭고 보다 확장된 역량 개발의 필요성을 논의함
 - 이를 통해 지속·회복·사회통합에 기여(4.1.), 문화 중심의 재건(culture-led regeneration) 지향(4.2), 문화·사회·환경·경제 간 시너지 증진(4.3), 인문(humanities)·과학·기술·문화·예술 융합(convergence)을 위한 R&D 투자 확대(4.4.), 미래세대에 공유된 가치 및 노하우 전달(4.5),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에 대한 역할 재인식(4.6)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우리나라도 국민의 예술 향유에 대한 수요와 콘텐츠의 산업적 규모가 확대되며, 문화산업의 후방산업(backward linkage effect)으로서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과 고급 예술인재에 대한 요구가 증가
 -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2018년 96.2억 달러에서 2022년 132억 달러(추정치)로 크게 확대되었고(문화체육관광부, 2024.1.5.), 콘텐츠 수출액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소비재 등 연관산업 수출액 1억 8천만 달러를 견인하는 효과가 있음(한국수출입은행, 2022)
 - 이에 따라 콘텐츠 산업을 국가의 경쟁력 및 신성장 동력으로서 간주하고 관련한 재정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나, 콘텐츠 산업의 후방연쇄효과를 유발하는 핵심 기초영역인 순수예술에 대한 재정적 및 인적 자원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함
 - 국가의 콘텐츠 산업 규모에 비해 미래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고, 장르 간·영역 간 경계를 넘나드는 미래 수요에 대응한 융합형 인재 양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 및 정책 대응 모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예술인재 양성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대학의 순수예술 학과 운영 기반이 악화되고 있어 순수예술 분야 기초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책임성 확대가 필요
 - 사립대학이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고등교육 체제 하에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는 비수도권 소재 재학의 미충원을 증가, 재정적 위기, 대학 경쟁력 악화 등의 원인임
 - 이에 정부는 신산업 및 사회 수요에 맞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지원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예술 분야 역시 미래 수요를 고려하고 현장 맞춤형 고급 예술인재 수급을 위한 고등교육체계 혁신을 위한 자구적 노력이 요구됨
 - 또한, 콘텐츠 및 예술 산업의 기반인 순수예술 학과의 보존·보호를 통한 후방산업의 기초를 확립하고, 지역의 교육 수요 해결, 대학-지자체-예술생태계 간의 협업을 통한 예비예술인의 정주여건 확보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함
- 이에 체계적인 미래예술인재 양성을 위한 제2국립예술대학 설립 방향을 검토하고,

- 정부의 현행 고등교육 정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정책 방안을 모색
- 최근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산업 발전을 선도할 주요 분야의 인재양성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부처별 분절적으로 추진 중인 분야별 인재양성 정책의 통합적 관리와 조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 인재양성 정책 추진을 지향
 - 또한, 제21대 국회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제정(2022.12.31.)함에 따라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예산이 확보되는 등 정책적·재정적 차원에서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
 -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문화·창의 부문을 재인식하고 고급 예술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함
 - 이를 통해 지역의 예비예술인 교육 수요를 해결하고, 교육의 범위를 전통적인 순수예술 분야에 더해 실무교육, 기술교육 등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미래 수요에 대응한 예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 중심의 정주여건 확보를 통한 지역예술생태계 활성화를 목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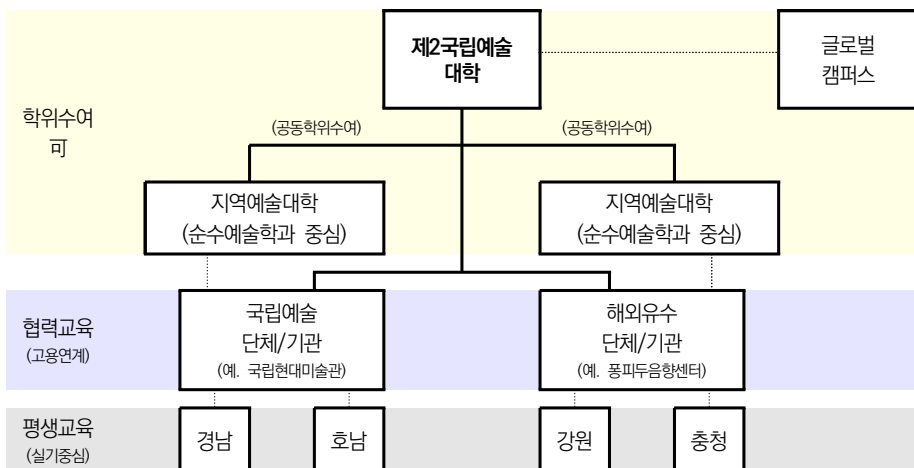
2. 설립 기본 방향

1) 설립 목표(Goal)

- 예술생태계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기술·산업적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예술계를 선도할 예술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제2국립예술대학을 설립
 - 우리나라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개원을 계기로 국가 주도의 순수예술 기초인력 양성을 본격화한 이후, 음악·연극·무용·미술·영화·전통예술 등 분야별 우수 예술인재를 배출하는 성과를 달성함
 -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예술 분야 국가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기초인력 양성 책임의 강화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규모의 확대 및 디지털화 등에 대응한 미래예술인재 적시 양성 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
 -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여전히 도제식 교육체계를 따르고 있어 직업적 예술인으로서 역량을 개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새로운 예술 활동 및 시장의 수요에 맞춘 국립예술대학 설립 방안을 구체화하여, 국립의 위상에 걸맞은 적절한 실기교육과 더불어 미래 예술인재 양성을 위한 기획·경영·정책 및 행정 등 실무교육을 포괄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예술인력 양성 방안을 모색함
- 지역의 교육 수요를 해소하고 예비 예술인재에 대한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제2국립예술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중심 예술생태계 조성에 기여
 - 국내 유일의 국립예술대학인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국가의 예술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 예술인재를 배양하였지만, 교육의 기회가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지역 예술인재 양성에는 소홀함
 - 이에 비수도권 지역에 제2국립예술대학 설립 방안을 검토하되, 기존의 지역예술대학과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형 예술대학 운영 방안을 제안함

[그림 3-1] 네트워크형 예술대학 구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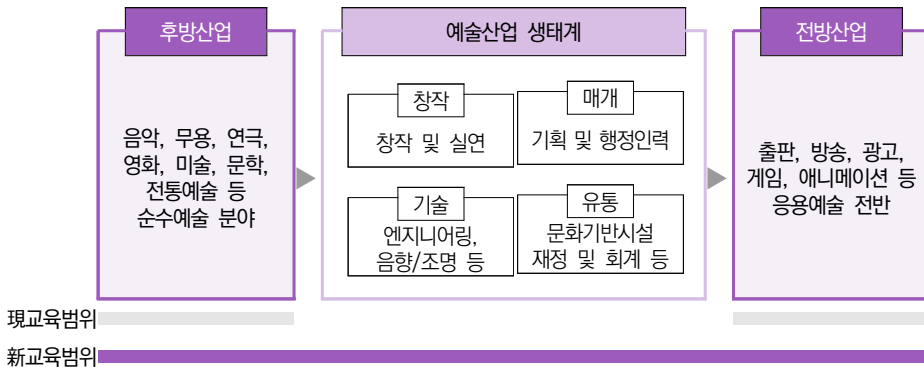


2) 교육 범위(Scope)

- 예술을 위시한 문화·창의 부문의 산업적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예술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전후방산업에 필요한 숙련된 고급 예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 범위를 설정

- 구체적으로 교육 범위는 순수예술 분야에 대한 실기교육과 더불어 기획, 경영, 행정 등 실무교육, 타 분야 연계의 융합교육을 포괄
 - (실기교육) 실기교육은 순수예술 분야 기초인력 육성의 핵심 영역이기에 필수적으로 반영함
 - (실무교육) 예술창작 및 실연과 향유 및 소비를 연계하는데 필요한 기획 및 행정, 국제교류 전문인력 등 매개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포괄적으로 포함
 - (융합교육) 미래 수요를 고려하여 로우테크 전문인력(음향엔지니어링, 전시디자인, 키네틱아트 등)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응용예술(웹툰, 게임) 활성화를 고려한 교육과정까지 포괄적으로 검토

[그림 3-2] 제2국립예술대학의 교육 범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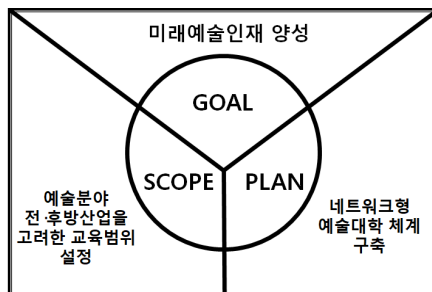


3) 운영 계획(Plan)

- 제2국립예술대학을 설립하여 지역예술대학과 연계한 '네트워크형 예술대학 체계'를 구축
 - 지역의 예술인재 양성을 책임질 제2국립예술대학을 설립하여 국립대법인 혹은 특별법법인 등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제2국립예술대학을 중심으로 공동입시·공동학위제를 운영함
 - 제2국립예술대학 설립이 기존의 예술대학이나 일반종합대학 내 단과대학 혹은 예술전공 학과 운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 체계 하에 상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한 주요 대학과 공동입시·공동학위제 운영 방안을 모색함

- 또한 지역사립대학 및 해외유수대학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제도 운영을 검토
 -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해외명문대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공동학위(Joint Degree) 및 복수학위(Dual Degree)를 수여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립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네트워크형 국립예술대학의 목표는 폐교·폐과 위기에 놓인 지역대학에서 운영 중인 순수예술학과의 보존·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추진 중인 공동·복수학위제와 차이를 지니지만, 상호간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한다는 점에서 절차적 측면에서는 유사함
- 마지막으로 지역수요 예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역대학 중심의 예술인재를 양성하고 졸업 이후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및 국공립 예술단체에 고용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계약학과’를 운영
 - 제2국립예술대학 운영의 실효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계약학과 제도를 활용한 고등교육 중심의 예술인재 집중 육성 및 국공립 예술단체·기관에 고용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
 -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학과 제도를 활용하여(산업협력법 제8조 근거), 지역의 주요 문화시설 및 단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함양하고 대학-지역예술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미래예술인재 전문성 확보 및 고용 안정성 강화, 양질의 숙련인력을 수급하는데 기여
- 그 외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순수예술 분야 평생교육을 책임짐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

[그림 3-3] 제2국립예술대학 설립 기본 방향(안)



제3절 국립예술대학 운영 계획(안)

1. 설립 방안

1) 설립안 개요

- 국립예술대학 설립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첫째는 ‘법인 형태의 국립예술대학’ 설립이고 둘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기관 형태의 국립예술대학’ 설립임
- 첫 번째 설립안은 국립대법인 또는 특별법법인 형태의 제2국립예술대학을 신설하는 방안이며 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대법인격의 학교는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가 있으며, 각 국립대학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법적 지위, 조직 운영, 재무회계, 부설학교 설립 근거 등을 확보하고 교육부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음
 - 특별법법인 형태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개 과학기술원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각각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음
- 두 번째 설립안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하에 예술대학(예술학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부설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며, 현재의 설치령에 부설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조문 개정이 필요함
 - 현재 서울, 세종, 광주, 통영에 설치·운영 중인 한국예술영재교육원과 같은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이며, 부설기관으로 설립할 경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부설기관 설립 근거가 필요함

〈표 3-3〉 국립예술대학 설립 방안

| 구분 | 법인 형태의 국립예술대학 신설 |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기관 형태의 설립 |
|-------|---|---|
| 법적 지위 | 국립대법인 또는 특별법법인 |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하 기관 |
| 법적 조치 | 제2국립예술대학 설치법 제정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개정 |
| 고려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및 교육시설, 교원확보 등 학교 설립을 위한 절차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당한 시간 소요 • 고등교육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대학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같은 부설기관 형태의 설립이므로 즉시 적용이 가능 • 새로운 대학 설립이 아닌 기존 대학에 부설기관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미비함 |

- 대학설립을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제11조, 「고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대학설립·운영규정」 등에 의거하여 교육시설, 교원확보, 재정요건, 학사운영 계획 등 일정 기준의 설립요건을 충족해야 함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에 따르면,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주체는 제4조에 따른 교사, 제5조에 따른 교지, 제6조에 따른 교원,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기준을 갖추고 교육부장관에게 개교조치를 받아야 함

[그림 3-4] 대학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

| 교육기본법 |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법시행령 | 대학설립·운영 규정 |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학교설립 등)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①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해야 한다. (이하 생략) • 제4조(교사) • 제5(교지) • 제6(교원) • 제7(수익용기본재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대학설립계획서등의 제출)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포괄적 규정 | 대학설립을 위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 제2조에 의거하여 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해서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위임 |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대학설립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 규정 | 대학설립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및 설립허가/인가 절차 규정 |

- 교사기준면적은 예체능 계열의 경우 학생 1인당 19㎡가 요구되며(별표 3), 교지기준면적은 학생정원에 따라 상이하여 교사기준면적 이상(정원이 400명 초과~1,000명 미만일 경우)이거나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정원이 1,000명 이상일 경우) 요구됨(별표4)
- 교원 확보 기준은 별표5에 따라 예체능 계열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 20명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설립인가(국립대학의 경우 개교조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교원 확보 기준의 2분의 1 이상 확보할 것이 요구됨

-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주체는 대학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에는 대학의 종류, 명칭, 위치,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 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교사건축계획, 교지확보계획, 교원확보계획, 대학 재정운영계획, 교육과정운영계획, 설립자의 학교 경영계획을 포함

〈표 3-4〉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 설립기준

| 법적기준 | 교사(敎舍) | 교지 | 교원 | 수익용기본재산 |
|---------------|--|--|---|--|
| 대학설립·운영 규정 | 제2조제1호 | 제2조제1호 | 제2조제2호 | 제2조제3호 |
| | 제4조(교사) | 제5조(교지) | 제6조(교원) |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
| | 별표2(교사시설의 구분) 별표3(교사 기준면적) | 별표4(교지기준면적) | 별표5(교원산출기준) | -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본시설, 지원 시설 및 연구시설, 부속시설 등의 교사 확보(별표2) •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별표 3) - 예체능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 19㎡ 또는 14㎡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교지기준면적을 충족(별표4) - 400명 이하: 교사건축면적 이상 - 400명 초과~1,000명 미만: 교사기준면적 이상 - 1,000명 이상: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인가 시에는 제6조에 따른 교원 확보 기준의 1/2 이상을 확보 - 교원 1인당 예체능계열 학생수 20명 기준(별표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조에 따라 수익용본재산 확보가 요구되나(예. 대학 300억원), 공공이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외 -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은 국가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 |

- 지역 거점의 국립예술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대학과 국립문화예술시설 및 기관을 연계한 고등교육기관 운영 모델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하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사례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순수예술 교육 중심의 지역 거점 교육기관(예.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을 지역의 주요 예술대학과 연계하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과정에 지역의 문화예술시설 및 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현장 실습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함(3차원 교육시스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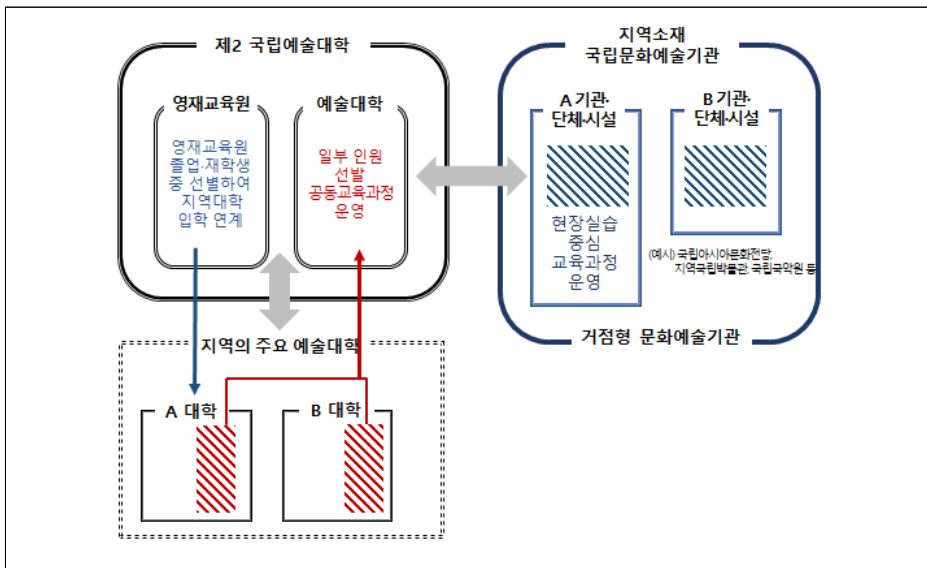
-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지역의 예술대학, 국립문화예술시설 간 연계 체계를 통해 예술인재 발굴부터 ‘기초예술교육-고등종합교육-현장연계교육(연수 등)-졸업 이후 일자리 연계’의 일련의 시스템을 마련함
-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의 서울캠퍼스를 제외한 세종, 광주, 통영 3개 지역캠퍼스 사례를 들어 지역대학과 국립문화예술시설 연계의 운영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표 3-5〉)
- 지역캠퍼스별 운영 중인 음악, 무용, 전통예술, 융합 분야 전공과 지역의 문화시설 및 대학의 예술학과 운영 현황을 고려한 지역별 특성에 따른 발전 및 운영 모델임
- 해당 모델은, 첫째 기존의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지역캠퍼스를 운영함에 있어 학생 선발을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교육원 졸업생 일부를 지역대학 입학 과 연계하는 방안, 둘째 지역대학의 음악 및 미술 단과대 정원 중 일부를 선별하여 제2국립예술대학 체계 내에서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 상기의 적용 방안은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 및 지역 특성화 전략 수립 논의 후 결정할 수 있으며,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지역캠퍼스 중심의 예술대학-문화시설 연계 모델이 사례는 다음의 표를 참고

〈표 3-5〉 국립예술대학 운영 모델 (예시)

| 구분 | 충청권 모델 | 호남권 모델 | 경상권 모델 |
|-------------------|---|---|---|
| 거점학교 |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 (음악, 무용, 전통예술, 융합) |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 (음악, 무용, 전통예술, 융합) | 한국예술영재교육원 통영캠퍼스 (음악, 무용, 전통예술, 융합) |
| 지역대학 (네트워크 대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대학교(예술대학) - 음악과, 관현악과, 회화과 등 • 충북대학교(융합학과군) - 조형예술학과, 디자인학과 • 광주대학교(예술대학) - 무용학과, 영상학과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대학교(예술대학) - 미술학과, 음악학과, 국악학과 등 • 전북대학교(예술대학) - 무용학과, 미술학과, 음악과 등 • 목포대학교(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 - 음악공연기획과, 아트앤디자인학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대(예술대학) - 음악학과, 국악학과, 미술학과 등 • 계명대(음악공연예술대, 미술대) - 관현악과, 연극뮤지컬과, 회화과 등) • 부산대(예술대학) - 음악학과, 미술학과, 무용학과 등 |

| 구분 | 충청권 모델 | 호남권 모델 | 경상권 모델 |
|---|--|---|---|
| 지역소재 국립문화·예술기 관 및 주요 기관 (네트워크 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현대미술관(청주, 대전) 국립박물관(부여, 공주, 청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박물관(광주, 전주, 익산, 나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영국제음악당, 대구오페라하우스, 부산오페라하우스(예정), 국립부산국악원 등 국립박물관(경주, 대구, 김해, 진주) |
| 중점운영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화 분야: 미술,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에 미술, 건축 분야를 포함 연계 분야: 국립현대미술관 중심으로 시각예술, 건축, 영상 분야 연계 방향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화 분야: 음악, 무용, 전통 예술 연계 분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국악원 중심으로 전통공연예술 분야 연계 방향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화 분야: 음악, 무용 연계 분야: 통영국제음악당, 대구오페라 등 주요 공연시설 중심으로 음악, 무용 연계 방향 검토 |

[그림 3-5] 국립예술대학 운영 모델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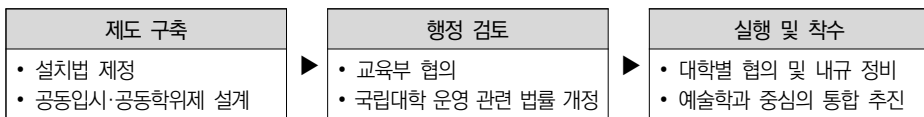


2) 설립안 구체화

① (제1안) 법인 형태의 국립예술대학 신설

- 전국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예술관련 학과 간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거점(flagship)이 필요하므로 제2국립예술대학 신설 방안을 검토

- 개별 설치법 제정에 근거하여 설립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이자 국립대법인 또는 특별법 법인 형태의 법적 지위를 갖는 기관으로 설립
 - (제도 구축) 국립대법인 또는 특별법법인 형태의 제2국립예술대학 설립을 위한 설치법을 새로이 제정하고, 법률 내 예술전공 학과 간 네트워크 운영, 공동입시·공동학위제 운영이 가능함을 명문화
 - (행정 검토) 17개 시·도에 위치한 국립대학 예술학과 중심의 통합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교육부 협의를 거친 후, 「고등교육법」, 「국립학교설치령」,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개정
 - 주요 지역대학과 협의 후, 협의 사항 내규 정비를 바탕으로 예술학과 중심의 통합 운영을 추진하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



- 이 경우, 법인 형태의 국립예술대학 신설을 위해서는 현재 설치령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의 운영상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개별 설치법을 제정하고 대학설립계획서 등을 작성할 필요

② (제2안)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기관 형태의 설립

- 비수도권 지역의 예술인재 양성 및 교육 수요 해결을 위한 제2국립예술대학 설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현존하는 대학의 운영 및 재정적 위기를 감안하면 대학 신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어려움
- 이에 국가 유일의 국립예술대학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네트워크형 예술대학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현재 통영, 세종, 광주에 운영 중인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중심으로 지역별 국공립 및 사립대학 예술전공 학과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임
- 다만,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설치령에 근거한 각종학교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지역의 국공립 및 사립대학 간 통합 학사운영을 위해서는 설치법을 제정하고

국립대학의 지위로 격상할 필요

- (제도 구축) 현재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을 설치법으로 제정하고 네트워크 운영 및 공동입시·공동학위제가 가능함을 명문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제도를 네트워크 대학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 (행정 검토) 예술전공 학과에 한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 입시 제도를 전환한 학교를 중심으로 ‘국립예술대학 기관 인증’을 부여
- 국립예술대학 기관 인증을 부여할 경우 국립의 위상에 걸맞은 교육의 질 관리가 필수적이며, 첫 번째 안과 마찬가지로 성과관리 체계를 구체화하여 적용

| 제도 구축 | 행정 검토 | 실행 및 착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법 제정 또는 설치령 개정 • 공동입시·공동학위제 설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협의 • 국립대학 운영 관련 법률 개정 • 국립예술대학 기관 인증 부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별 협의 및 내규 정비 • 예술학과 중심의 인증 추진 |

- 제2국립예술대학을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부설기관 형태로 설립할 경우, 법적지위가 각종학교의 부설기관이 되므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일반대학과 공동입시 및 학위제를 운영하는데 제약이 존재
- 또한 국립예술대학 기관 인증과 같은 제도 도입 시 문체부의 대학지원 예산 확보가 필요하나, 최근 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을 축소하고 대학 지원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확보 논리가 필요

2. 단계별 운영 계획

1) 네트워크형 예술대학 구축

① 추진 배경

-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립대학의 경쟁력 및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시한 주요 추진 과제를 고려하여 순수예술 학과 중심의 네트워크형 예술대학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
-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예술인재 양성의 대부분을 국가 주도로 추진

하고 있고 40여개 안팎의 예술대학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주도 예술학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외 부재하여 미래예술인재 양성에 한계

-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대학의 운영 및 재정 위기가 가시화 되는 가운데 각 지역별 대표하는 국립예술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거점형 예술대학(flagship university of the arts)을 중심으로 전국 국립대학 예술학부 및 학과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

② 운영 계획

- 제2국립예술대학을 신설하여 개별 시·도에 위치한 국립대학 예술 분야 단과대학 및 학과간 **통합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지역대학의 순수예술학과 보호·보존을 목표로 **실기교육 중심**의 운영을 지원
- ‘국립’에 걸맞은 예술교육 시스템(예. 한예종 입시)을 구축하여 네트워크형 대학들과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네트워크형 예술대학을 콘서트바토리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 한예종 입시와 같은 예술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공동입시 방식**으로 추진해 교육의 보편성을 확보하되,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명확한 성과목표 및 지표 하에 관리
- 네트워크형 예술대학 간의 학사 교류와 2개 이상 대학의 복수전공을 허용하여 **복수학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
 - 입학 시 결정된 전공이 졸업까지 이어지는 단선 구조로는 다양한 학문 및 경험에 기반한 융합역량 함양이 어려우므로, 필요시 네트워크형 예술대학 내 복수전공을 의무화하고 국립대학학위 2개 수여 방안을 검토

2) 지역사립대 협력 체계 구축(RISE)

① 추진 배경

-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관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교육발전특구 계획, 글로벌대학 30, RISE 사업 등 고등교육 지원체계 전반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

- 이러한 변화는 행정적 권한의 이양과 더불어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발전-대학지원-산업발전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부터 17개 시·도의 RISE 계획에 따른 대학지원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
 - 그동안 교육부가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상당 부분 줄어들고 지역대학 지원사업은 고특회계를 활용한 RISE 사업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부처별 대학지원 사업도 단계적으로 통합되는 등 변화가 예상
- 이에 따라 지역대학들의 예술전공 학과들도 RISE 체계 내에서의 생존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이나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연계 교육 등 구체화된 사업 마련의 필요성 증가
 - 지역대학의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국립대학에는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운영, 국립대학의 자원 및 기술 등 개방, 지역 인재 및 취약계층 등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전반적 상황을 고려하여, 예술대학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검토와 더불어 개별 시·도에서 수립한 RISE 체계 내에서 예술대학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② 운영 계획

- 국립대학 중심의 네트워크형 예술대학이 구축된다는 전제 하에, 지역사립대학과의 **2차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2차 네트워크에서는 기획·행정 등 실무 **교육 중심**의 운영을 지원
- 지역사회립대학의 모든 예술학과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시행 예정인 시·도별 RISE 계획 내에서 예술학과 운영 및 발전 계획이 비교적 명확한 대학을 중심으로 **‘국립예술대학 기관’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¹⁹⁾
- 네트워크형 예술대학(1차 네트워크)과의 학사 교류를 통해 **공동학위 수여 방안**²⁰⁾

19) 프랑스 그랑제콜 기관 인증을 참고

을 검토하되, 지역사립대학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일부 학생에 한하여 공동학위를 허용하여 교육의 질 관리 방안을 확보

3) 현장 연계 네트워크 구축

① 추진 배경

- 우리나라는 발전국가 시기를 거치며 국가 성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에 주력하며 대학의 기능을 다소 협소하게 인식해왔으나, 최근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필요성을 강조
- 특히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지역인재양성에 있음을 인식하고 지역대학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대학에는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계 수요에 맞는 운영을 할 것을 요구
- 첫째, 지자체-대학-산업체 연계 거버넌스를 형성해 지역수요에 맞는 교육체제로 개편하고(필요시 계약학과 운영), 둘째 인구고령화 시기 중장년층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

② 운영 계획

- 지역별 예술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예술생태계 및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예술대학과 문화시설 및 예술단체 간 **‘협약’을 통한 현장중심(field-oriented)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
 -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제2국립예술대학의 교육범위가 순수예술 실연자·창작자에 관한 후방산업 분야, 향유자·소비자에 가까운 전방산업 분야, 그리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주요 매개자인 바, 이들을 예술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예술인재로 성장시켜 예술계 현장에 적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전문예술가(specialist)의 경우 자신의 예술적 활동을 바탕으로 스스로 기획 및

20) 독일의 이중 전공과정(Duales Studium) 제도를 참고.

독일의 이중 전공과정은 전공교육과 직업교육/실습을 결합한 제도로, 사업체에서의 실습이 전공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어 교육이 대학과 사업체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임. 1,600개 이상의 이중 전공과정이 운영 중에 있고 대부분 전문대학에서 제공하지만 일부 직업아카데미, 사립대학, 국공립대학에서도 선택이 가능함. (출처: 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dienst (2024.08.26. 접속), [Hochschulen und Studienangebote] Das duale Studium.)

연출하는 능력이 요구되지만 기예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도제식 교육으로는 그러한 실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임

- 지원인력(support worker)의 경우 일반 취업준비생과는 다른 커리어패스(career pat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진로 설계가 필요함

- 대학에서 양성하는 예술인재와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간 미스매치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술대학과 지역의 문화시설, 예술단체 간 협약을 통한 ‘문화예술 계약학과’ 운영 방안을 검토

- (후방산업) 순수예술에 관한 후방산업 교육의 경우, 대학교육 이후 현장에 진입해 활동하는 예술인재 대부분이 정부의 공공지원을 통해 예술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사실상 교육 단계에서부터 기입가 정신 및 직업적 예술가로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이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대학교육 이후의 진로 설계가 불분명 ➡ 졸업 후 지역예술단체에 연계 고용하는 체계를 마련

- (매개 및 전방산업) 최근 예술계에서 요구되는 인력이 순수예술 분야 실연자·창작자부터 기획·행정 등 지원인력, 기술 분야 전문인력 등으로 다양해지고 인접분야와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지역 및 현장 수요에 맞는 운영방식 도입이 필요 ➡ 졸업 후 지역문화시설에 연계 고용하는 체계를 마련

- 한편, 최근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대학에 요구하는 역할이 변화된 점을 고려하여, 지역주민 대상의 순수예술 분야 **평생교육 체계**를 강화

문화예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방향 설정 연구

제4장

결론

제1절 결론

- 본 연구는 지역대학 중심의 순수예술 학과 통폐합 및 융복합 가속화로 인한 기초인력 육성의 한계를 인식하고, 예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특히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정치, 경제, 사회, 기술)와 새로운 예술 활동 양상을 살펴보고 미래 예술계를 선도할 예술인재의 범위를 순수예술 분야 기초인력과 기획, 경영, 행정 등 실무인력, 국제교류 및 기술 등 타 분야 연계의 융합인력 등 포괄적으로 검토
- 순수예술 분야 기초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예술대학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제2국립예술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동시에 현존하는 지역예술대학과의 상생을 위해 제2국립예술대학의 운영 모델을 '네트워크형 예술대학'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함
- 먼저, 제2국립예술대학 설립을 위해 국립대법인 또는 특별법법인 형태로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의 한국예술종합학교를 활용해 한국예술영재교육원과 같은 부설기관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법인 형태의 국립예술대학 신설을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등을 확보하고 대학설립계획서를 작성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고, 법인 형태의 학교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 등 일련의 제도적 절차가 요구됨
 - 반면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기관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현행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부설기관 설립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대학규정집에 네트워크형 예술대학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 법인 형태이든 부설기관 형태이든 그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설립된 제2국립예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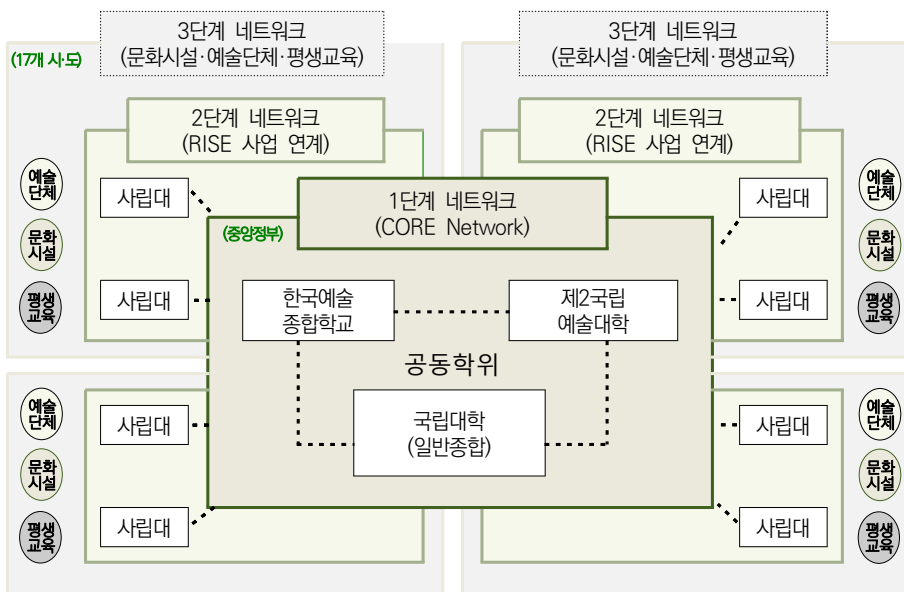
학을 중심으로 지역예술대학 및 지역문화시설과 연계한 현장 실습 중심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 방안을 검토함

- 구체적인 단계별 운영 방안으로는 네트워크의 거점이 되는 제2국립예술대학을 중심으로 ①국공립 예술대학 중심 네트워크, ②지역예술대학 공동 교육과정 운영, ③지역문화시설·예술단체 연계 등 필요로 하는 절차에 따라 제시함

〈표 4-1〉 제2국립예술대학 단계별 운영 계획(안)

| 구분 | 1단계 네트워크 | 2단계 네트워크 | 3단계 네트워크 |
|--------|-------------------------|------------------------------|----------------------------------|
| 단계별 특징 | 국공립 예술대학 중심 네트워크 | 지역(사립)예술대학 MOU 기반 공동 교육과정 운영 | 지역문화시설·예술단체 연계(유관기관 및 일자리 정책 연계) |
| 추진 방향 | 국공립 중심의 네트워크 및 관련 제도 구축 |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 정책계획(RISE) 연계 | 문화예술 계약학과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 운영 |

[그림 4-1] 제2국립예술대학 단계별 운영 계획(안)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네트워크형 예술대학을 중심으로 순수예술 분야 기초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지역의 역량 있는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예술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나아가 미래예술계에 필요한 예술 분야 산업 전문가, 국제교류 전문가, 지역사회

회와의 협력이 가능한 예술인력 육성을 통해 지역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 예술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제2국립예술대학 운영 목표 중 하나를 지역예술계 자생력으로 설정함으로써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및 예술정책 목표인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마음껏 누리는 문화예술’ 이행에 기여함.

- 미래예술인재 양성을 위해 검토한 제2의 국립예술대학이 마중물이 되어 전국 단위의 예술 활동 및 예술 향유에 대한 수요를 적절히 해소할 뿐만 아니라, 미래예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이를 위해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네트워크형 열린 대학 개념으로서의 제2국립 예술대학 설립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문헌자료〉

- 김규원·김소연·변지혜(2022),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 방향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 용(2024), 「교육발전특구 추진 현황과 대학의 과제」, 대학교육 224호.
-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3), 「저출산·축소사회 시대, 인구 위기 극복 해법」, 싱크탱크 저널 포커스 2023 여름호.
- 이성은·김흔(2024), 「2024년 고등교육 부문 관련 예산 현황 분석」, 고등교육 포커스 제9호(2024.1.31.).
- 고영구(2021), 「균형발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학정책의 전환」, 지역사회연구 제29권2호.
- 교육부(2022a), 「2023년 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안)」.
- 교육부(2022b), 「'22~'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 교육부(2023), 「첨단분야 인재양성 정책 전략」.
- 교육부(2024),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 기본계획」.
- 기획재정부(2024),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 문보은(2023),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 방향」, 교육&재정 웹진 vol.16.
- 문화체육관광부(2023),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
-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1년 기준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 변수정·황남희(2018),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258호.
- 유네스코(2018),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글로벌 리포트」. (한국어판)
- 이상립(2023),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향후 대책 방향」, 싱크탱크 저널 포커스 2023 여름호.

- 이정은(2024), 「가계동향조사(2019~2023년)를 통해 본 가구의 오락·문화 지출 변화」,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여름호.
- 정영길(2024), 「RISE,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대학교육 225호.
- 주오이시디(2024a), 「한눈에 보는 교육 2024 주요 내용」.
- 주오이시디(2024b),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24」.
- 통계청(2024a),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 통계청(2024b),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 한국교육개발원(2023), 「2023 교육통계연보」.
- 한국사학진흥재단(2023), 「2022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 분석보고서」.
- 한국수출입은행(2022), 「K콘텐츠 수출 경제효과」.
- 황아람(2024), 「OECD 국가의 문화재정 동향」, KCTI 인사이트 제3호.
- G20 (2023), G20 Culture Working Group TERMS OF REFERENCE.
- Hassan Bakhshi (2022), *How can we measure the creative economy? The Cunningham Project*, Media Internaional Australia, 182(1): 21~27.
- Hassan Bakhshi, Ian Hargreaves, Juan Mateos-Garcia (2013), *A Manifesto for the Creative Economy*, UK: NESTA.
- Hochschulrektorenkonferenz (2023), Hochschule in Zahlen 2023.
(출처: <https://www.hrk.de/themen/hochschulsystem/statistik/>)
- OECD (2021),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Note for Italy G20 Presidency Culture Working Group.
- OECD (2023), Regional Outlook 2023.
- OECD (2024a), Curriculum Flexibility and Autonomy: Promoting a Thriving Learning Environment.
- OECD (2024b), Society at a Glance 2024.
- Peter Llpyd Higgs, Stuart D. Cunningham, Hasan Bakhshi (2008), *Beyond the creative industries: Mapping the creative economy in the United Kingdom*, UK: NESTA.
- UNESCO(2019), Culture & working conditions for artists: implementing the 1980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
- UNEN(2023a). New Economic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etting a Path

- Towards New Economic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 Overview.
- UNEN(2023b). New Economic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reative Economy.
 - UNCTAD(2022a), Advancing the measurement of the creative economy.
 - UNCTAD(2022b). Creative Industry 4.0.
 - UNCTAD(2022c). Creative Economy Outlook 2022.
 - UNCTAD(2024), Creative Economy Outlook 2024.
 - Wissenschaftsrat(2021), Kunsthochschulkonferenz.
(출처: <https://diekunsthochschulen.de/>)

〈보도자료 및 기사〉

- 교육부 보도자료(2023.5.25.),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 교육부 보도자료(2024.2.28.), “윤석열 정부의 지역주도 교육개혁 본격 시작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결과 발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07.3.22.), 과학인력 ‘유년에서 노후까지’ 육성·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4.1.5.), “22년 콘텐츠 수출액 역대 최대, 132억 달러 돌파”.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4.8.28.). “2025년 문체부 예산안 7조 원 돌파, ‘문화로 행복한 하루, 풍성한 내일’ 연다”.
- 시사미래신문(2023.5.11.). “문체부·5개 대학, 예술·콘텐츠 인재 양성한다.”
(출처: <https://www.sisamirae.com/news/article.html?no=105697>)
- 한국대학신문(2024.5.13.). “[통계로 본 대학] ‘학령인구 급감·대학 구조개혁’ 불구 수도권 일반대는 10년간 ‘철옹성’”
(출처: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62980>)
- Rowan King(2024.6.25.). “New data shows universities open their doors to local communities”
(출처: <https://www.universitiesuk.ac.uk/latest/insights-and-analysis/new-data-shows-universities-open-their>)
- The Guardian(2024.1.7.), “‘A national emergency’: UK theatres fear closure after more local funding cuts”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culture/2024/jan/07/a-national-emergency-uk-theatres-fear-closure-after-more-local-funding-cuts>)

〈데이터 및 홈페이지〉

- ANdEA (<https://andea.fr/>)
- Campus France(<https://www.coree.campusfrance.org/>)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3년 고등 학교별X학과별 데이터
-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목록

집필 내역

연구 책임

황아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공동 연구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 자문

곽소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과장

이기호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이성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문화예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방향 설정 연구

발행인 김세원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4년 2월 3일

발행일 2024년 2월 3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9-11-7198-043-7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4.e35>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황아람·김규원(2024), 문화예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방향 설정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4.e3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www.kcti.re.kr

